

—  
2017년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

A decorative graphic consisting of a grid of small dots. The dots are arranged in a roughly rectangular shape, with some dots being solid black and others being light gray. The grid is positioned to the left of the main title text.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 PROGRAM



13:00~13:30	등 록	
13:30~13:50	개회식	
	개회사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환영사	김준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축사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13:50~14:10	기조연설	성경룡 한림대학교 교수, 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14:20~16:00	【세션 1】 국토균형발전과 4차 산업혁명	
	발표 1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추진방안 차미숙   지역경제연구센터장
	발표 2	균형발전 선도거점 육성을 위한 혁신도시 활성화방안 류승한   산업입지연구센터장
	발표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국토전략 이재용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
	토론	〈좌장〉 최병선 가천대학교 명예교수, 前 국토연구원장 김경욱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안장원 중앙일보 부동산팀장 정창무 서울대학교 교수 초의수 신라대학교 교수 최병관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한동환 한국미래발전연구원 부원장
16:00~16:20	휴 식	
16:20~18:00	【세션 2】 도시재생과 주거안정	
	발표 1	도시재생 뉴딜의 실효성 제고방안 이왕건   도시재생연구센터장
	발표 2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발전방향 천현숙   주택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발표 3	빅데이터 기반의 국토·도시정책 추진방안 임은선   국토정보분석센터장
	토론	〈좌장〉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김세용 고려대학교 교수 류 훈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기획관 오동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희연 서울대학교 교수 임상균 매일경제 부동산부장 정경훈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18:00	폐 회	



# 차례

## 세션 1: 국토균형발전과 4차 산업혁명

1.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추진방안 / 3
2. 균형발전 선도거점 육성을 위한 혁신도시 활성화방안 / 21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국토전략 / 37

## 세션 2: 도시재생과 주거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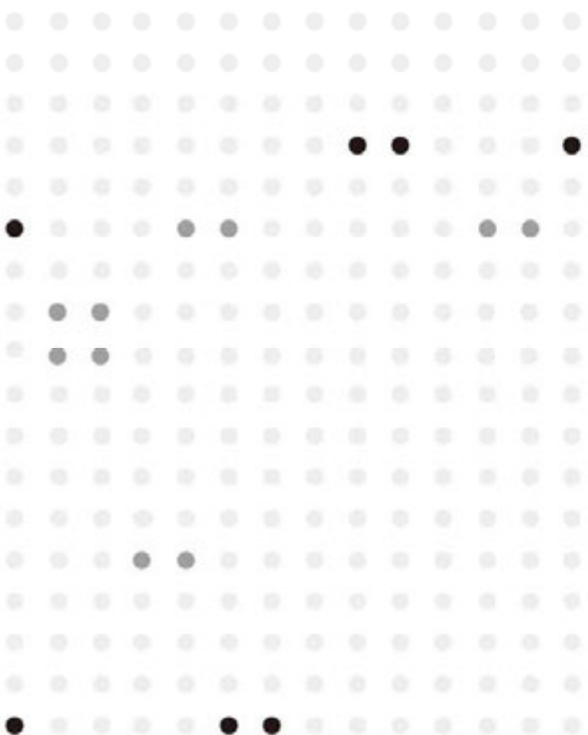
1. 도시재생 뉴딜의 실효성 제고방안 / 51
2.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발전방향 / 63
3. 빅데이터 기반의 국토·도시정책 추진방안 / 85



—  
세션 1:

# 국토균형발전과 4차 산업혁명

—



1.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추진방안

차미숙 지역경제연구센터장

2. 균형발전 선도거점 육성을 위한 혁신도시 활성화방안

류승한 산업입지연구센터장

김진범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3.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국토전략

이재용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

이백진 첨단인프라연구센터장



2017년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추진방안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차미숙 지역경제연구센터장



##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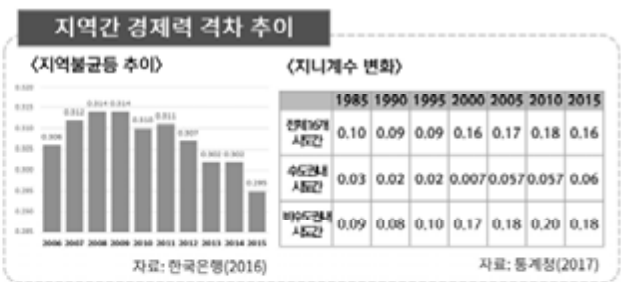
- I. 성과와 한계
- II. 정책패러다임 변화와 대응
- III. 새로운 균형발전정책 추진방향
- IV.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추진방안



## 성과와 한계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는 총량적으로 안정화·완화 추세, 그러나 질적 측면의 격차와 새로운 형태의 격차 발생

- 수도권 인구집중도 및 지역간 불균등 수준 완화·안정화 추세
- 좋은일자리, 생활인프라·문화서비스 등 질적 측면 격차는 여전
  - 고임금 일자리인 비즈니스서비스업은 70.3%가 수도권에서 증가
  - 문화예술행사 관람율(2016) : 대도시 81.2% > 중소도시 81.0% > 읍·면 65.7%
- 수도권과 지방 간 이원적 격차에서, 시·도간 격차 및 동일 지자체내 격차문제 발생



## 성과와 한계

내생적·자립적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목표로한 국가균형발전시책 추진으로 지방 물적기반 조성 등 일부 성과 가시화

- 세종시, 혁신도시(10개)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도시건설은 어느정도 완료
- 지역의 자립역량 강화와 혁신창출·확산을 위한 토대로 활용 가능

### 혁신도시 성과

- 이전공공기관
  - 154개중 144개 이전완료(4만 6천명)
- 공공기관 직원 이전 현황
  - 2016년말 약 3만 2천명(가족동반 31%)
- 혁신도시 인구증가
  - 2014년 59,205명 → 2016년 149,570명 (목표 인구 267천명의 56%)
  - ※세종시인구: 2013년 25만명 → 2016년 14만 6천명
- 지방세 수입증가
  - 2013년 53,492 백만원 → 2014년 212,762 백만원
- 지역인재 채용률(2015. 1~12) 증가
  - 해당 시·도소재 지역인재 채용률 13.3% 차지
- 일부 혁신도시는 기업유치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 실현
  - 예시: 광주전남 혁신도시 에너지밸리 사례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축소도시 발생과 저성장의 고착화 대비, 새로운 균형발전정책 추진방안 모색 필요

## 참고 역대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제

### 참여정부(100대)

#### <균형발전 과제(21개)>

-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
-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력자원 개발
- 산학협력의 활성화
- 대학연구개발특구 육성
- 국가산업단지 혁신플러스터마 추진
- 지역전략산업 육성
-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자립형 지역개발
- 낙후지역 활성화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 및 제도개선
- 국가균형발전 평가제도 확립
- 지역특화발전 특구 추진
- 신축토구상 수립·추진
- 수도권 종합발전대책수립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 행정도시 추진체계 정비
- 행정기관 이전 추진
- 예정지역 지정·관리 및 보상
- 개발계획 등 수립 및 간섭사업 시행
- 행정도시 건설 홍보

#### 참여정부: 세종시와 혁신도시

- 비전: 전국이웃(2020)과 동반성장(2025)의 시화(2010)
- 전략: 자립형 지방화 (역동적 균형, 통합적 균형)
- 주요 추진과제
  1. 지역혁신체계 구축
  2. 전략산업의 육성
  3. 법제정 및 제도 개선
  4. 전국 최소기준의 충족

### 이명박 정부(100대)

#### <균형발전 과제(1개)>

- 광역경제권 구축
  -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권 활성화
  -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 이명박 정부: 5+2광역경제권

- 비전: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있는 지역창조
- 기본방향
  1. 세계화에 대응하는 광역경제권 구축
  2. 지역개성을 살린 특성화 지역발전
  3. 지방분권·자율분권 통한 지역수도 발전
  4. 지역간 협력·상생을 통한 동반 발전

### 박근혜 정부(140대)

#### <균형발전 과제(3개)>

-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 발전
  - 중수도시권 육성, 명품 세종시 건설 지원, 지역산업육성 및 산업단지 재창조, 동서통합지대 조성, 지역발전 정책추진체계 개편
- 지방대학 지원 확대
  - 지방대학 지원 확대, 채용담당제 도입 기회 확대
- 지역경제와 산업의 활력 제고
  - 일자리 창출 중심 지역산업 재정책, 지역투자 촉진 여건 개선, 지자체 자율성·연계성 확대, 지역특구제도 정비
  - ※ 40대 집중관리과제 미포함

#### 박근혜 정부: 지역행복생활권

- 비전: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 2~5개 시군구를 묶은 행복생활권(63개) 중심 HOPE Project 추진
- 주요사업은 5대 분야 20개 과제
  1. 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2.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혁신도시 포함)
  3.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재 양성
  4. 지역문화 육성
  5. 사각없는 복지의료

## 과제

지역혁신창출 및 성과 확산, 지역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중앙주도의 분산형 균형발전정책 추진관행·체질 개선 필요

### 1) 지자체의 재정운영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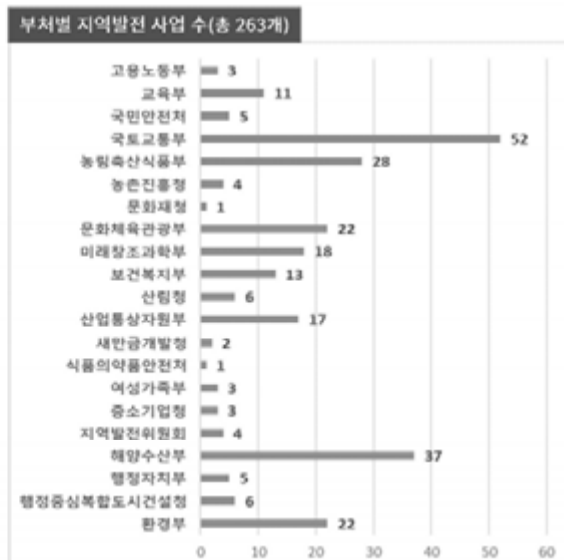
- 중앙정부 보조금 의존, 지방공공시설 확충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증가로 지방재정 압박 우려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절대인구 감소 → 시설 이용수요 감소 → 시설 수익창출 한계 → 시설 운영적자 지속
  - 저성장 고착화 → 지방재정 수입 감소 → 시설 유지관리비용 발생 →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
- 중앙정부 부처별·사업별 공모에 따른 보조금 지원방식으로 불필요한 경쟁과 낭비 유발

	2014	2015	비고
주요 공공시설 수	622	667	· 건립비용 100억원 이상(기초) · 건립비용 200억원 이상(광역)
운영비용	11,516	12,998	· 전년대비 12.9% 증가
운영수익	6,612	6,917	· 전년대비 4.6% 증가
적자규모 (억원)	-4,904	-5,756	

## 과제

### 2) 중앙정부 부처별 사업추진 관행의 개선과 연계·조정기능 강화

- 부처별 경쟁적·할거적 지역사업 추진
  - 포괄보조사업(31+6개 사업군)  
: 21개 부처 약 263개 사업 추진(2016)
  - 부처별 지역발전사업 예산 비중(경제발전계정)  
: 국토부(38.9%), 산업부(22.2%) 등
- 분절적(fragmented) 사업추진과 비효율 발생
  - ※ 지역발전위원회의 사업연계·조정권한 미비



## 과제

### 3) 포괄보조예산제도의 실질적 운영으로 정책성과 체감도 제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2003),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도입이후 예산규모가 2배로 확대되었으나, 정책성과 체감은 여전히 미흡

※ '05년 5.4조원 → '10년 9.9조원 → '15년 10.4조원 → '17년 9.8조원

- 포괄보조 지원 방식을 운영하고 있으나 무늬만 포괄보조예산제도 운영
  - 사업군별 포괄보조예산 지원방식 → 계정단위 포괄보조예산 지원방식으로 개선 검토
- 지자체의 자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 한계

(단위 : 조원)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경제계정	1.3	1.4	1.5	1.7	5.4	5.8	5.8	5.5	6.2	5.5	5.4	4.9
생활계정	4.1	4.5	5.0	5.8	3.8	3.7	3.6	3.5	3.4	3.5	4.5	4.6
제주·세종	-	-	0.3	0.4	0.4	0.4	0.4	0.4	0.3	0.3	0.5	0.5
합계	5.4	5.9	6.8	7.9	9.6	9.9	9.8	9.4	9.9	9.4	10.4	10.0

## 정책패러다임의 변화와 대응

## 메가트렌드와 정책이슈 전망

### 인구감소

2013년 거주지역 가운데,  
2040년에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지역이 52.9%에 달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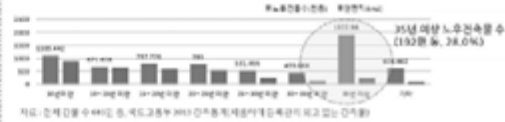


생활취약지역(Life Desert)  
고착화

구분	2013년	2040년
생활사각 지역 면적(km <sup>2</sup> )	2,791.5	2,876.25
거주지역 대비 생활사각 면적 비율(%)	5.77	5.99

### 저성장·노후화

35년이상 노후건축물이  
전체의 28%이고,  
연도미상 포함시 약 37% 차지



노후 발전시설 분포 현황  
(40년 이상)



노후 교육연구용  
건물 분포 현황(40년 이상)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2015)

## 메가트렌드와 정책이슈 전망

### 기술변화

4차산업혁명시대의 전개와  
초연결사회 진행



### 가치변화

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대, 삶의 질 증시  
공유경제(Sharing Economy)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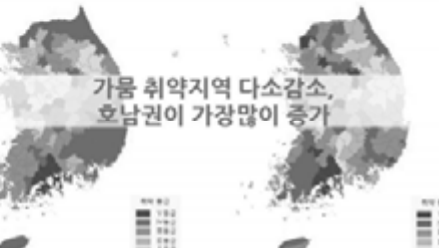
### 기후변화

재해취약지역 전망 (2100년)

전국 232개 지자체 중 홍수 취약지역이  
93개(40.1%)로 증가



가뭄 취약지역 다소감소,  
호남권이 가장 많이 증가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2015)

## 정책패러다임의 변화

지역이 주도적으로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은 지원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

### 균형발전 1.0 패러다임

- 분산형 균형발전
- 중앙정부 주도
  - 전국적으로 획일화
  - 부처별 분산적·개별적 접근
  - 지역간 경쟁과 갈등
- 개발중심
  - 부문별·개별적 접근(sectoral)
- 사업성과에 대한 체감도 저조
- 공급자 중심

### 균형발전 2.0 패러다임

- 분권형 균형발전
- 지방정부 주도
  - 지역 맞춤형 정책
  - 주체간 통합적 거버넌스
  - 지역간 연계와 협력
- 현명한 이용·관리
  - 공간통합적 접근(place-based)
- 사업의 실질적 성과·효과 도모
- 수요자 중심

## 분권형 균형발전과 중앙·지방의 역할

### 분산형 균형발전

중앙주도  
획일성

+

지역의존  
자율성 저해

- Trickle-down(낙수효과) 저조
- 전국적 획일화, 규제·감독
- 지방의 자율성·개성발휘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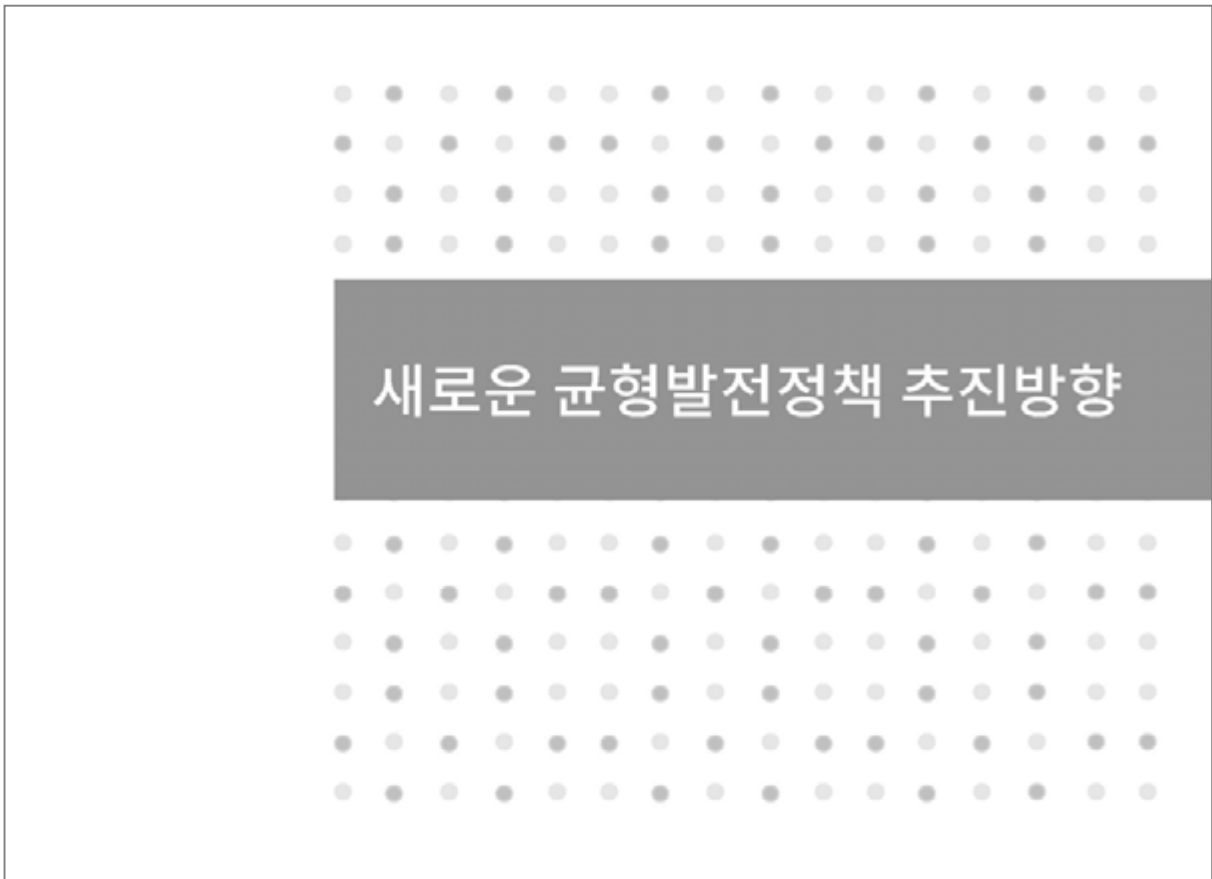
### 분권형 균형발전

지역주도  
다양성·  
자율성 강화

+

중앙지원  
사각지대 해소

- Trickle-Up(분수효과, 샘물효과)
- 맞춤형 지역지원과 사각지대 해소
- 지방의 다양성 → 혁신·경쟁력 원천



## 새로운 균형발전 정책방향

<b>목표</b>	<p style="font-size: 18px; font-weight: bold;">“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p> <p style="font-style: italic;">Inclusive &amp; Smart Connected Society</p>		
<b>추진전략</b>	스마트 지역발전	포용적 지역발전	분권형 지역발전
<b>추진과제</b>	<p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스마트혁신 창출을 위한 유연적 국토공간 조성</p> <p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혁신·중소도시의 新균형거점화 추진</p> <p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낙후지역의 新활력지대화</p> <p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지역간 협력·맞춤형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p> <p style="background-color: #f0f0f0; padding: 5px;">지역주도형 균형발전 추진시스템 개편·운영</p>		

2017년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추진방안 | 16



## 스마트혁신 창출을 위한 유연적 국토공간 조성

- 4차산업혁명시대 국가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유연적·다층적 공간전략 추진  
- 실물공간과 가상공간 결합 촉진, 일자리-생활융합 촉진

### 1 대도시의 글로벌 경쟁거점화

- 글로벌 대도시권의 성장관리와 지방대도시의 전략적 육성
- 기업·지자체 등 수요자 제안, 일자리창출 연계형 특구 도입 추진  
- 글로벌 비즈니스 업체들이 선호하는 경쟁력있는 교류공간 형성

### 2 혁신·중소도시의 新 균형거점화 및 지역혁신 확산

- 혁신·중소도시와 주변지역 연계 : 지역연합체, 스마트 강소도시권 육성
- 혁신도시 시즌2 프로젝트 + 도시·지역재생 연계 추진

### 3 과소지역의 집약적 정주체계 개편과 수요대응 스마트인프라 확충

- 집약적 정주체계 개편(Micropolis)과 국가공공서비스 기준 마련·제공

## 참고 스마트혁신 창출을 위한 국토공간 구상



## 혁신·중소도시의 新균형거점화

- 혁신도시, 세종시 등 기존 균형발전정책의 성과 실현
  - 도시건설 및 기관이전 (혁신도시 1.0) → 도시기능 활성화균형거점 (혁신도시 2.0)
- 분권 실현을 위한 新균형거점 지대 조성

### 1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혁신생태계 구축

- 지역혁신 창출을 위한 소규모 창업·혁신공간 조성·운영
  - ※ 영국의 엔터프라이즈존 (2014년 24개로 출발, 현재 48개 지정)

### 2 지능형 스마트도시·지역 육성 및 지역혁신 확산

- 기술혁신을 주도할 스마트인프라 및 스마트 도시·지역 기반 조성
- 혁신도시 시즌2 프로젝트 + 도시·지역재생 연계 추진

### 3 혁신·중소도시와 주변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 시군연합(City-Region Union) 구상
  - ※ 일본의 고차지방도시 연합(인구 30만명 규모), 영국의 Combined Authority

## 참고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향

### 스마트인프라기반의 新균형거점지대 조성

- 주변지역과 스마트인프라로 연계 강화
- 지역간 시설공유 및 광역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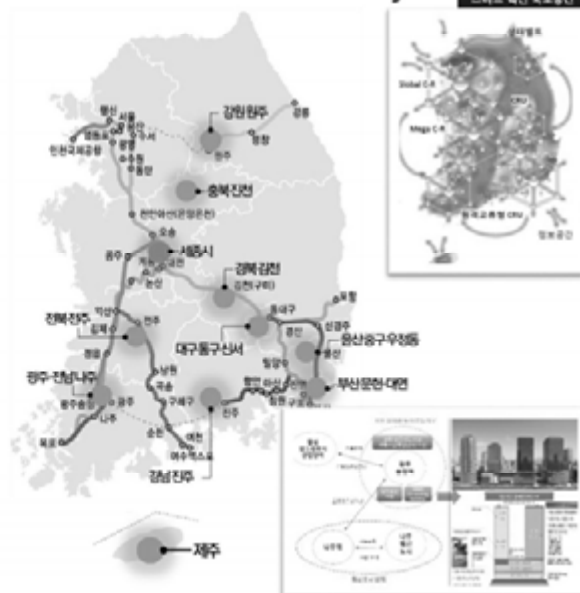
### 지역혁신창출·교류기반 조성

- 기업-대학-혁신기관간 연계와 교류
  - 지능형 스마트시티
- 수요자 중심(창업등)의 규제 개선
- KTX·공항 등과 연계, 시너지 확산

### 공간통합적 도시·지역재생 추진

- 생활인프라 및 도시재생 사업연계
- 노후인프라 정비 및 공유시스템
-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

### Smart Connected Community



## 낙후지역의 新 활력지대화

- 지역자산 활용한 新 활력지대 조성
- 사각지대 해소와 최소 삶의 질 확보 \_ National Minimum & Local Optimum 달성

### 1 인구감소 대비 생활공간 정비·재편 유도 및 스마트축소 추진

- 과소지역의 생활공간 재편 촉구와 수요응답형 생활인프라·서비스 제공
- 스마트축소(Smart Dedine) 및 지역내 유희토지시설의 용도전환 등 현명한 이용방안 강구

### 2 국민 참여형 낙후지역 회생 프로젝트 추진

- 대안적 생활·국민휴식 공간으로 재창출 유도
  - 1인 다지역거주(제2, 3의 고향갯기 운동)와 고향사랑기부세 연계, 고향사랑펀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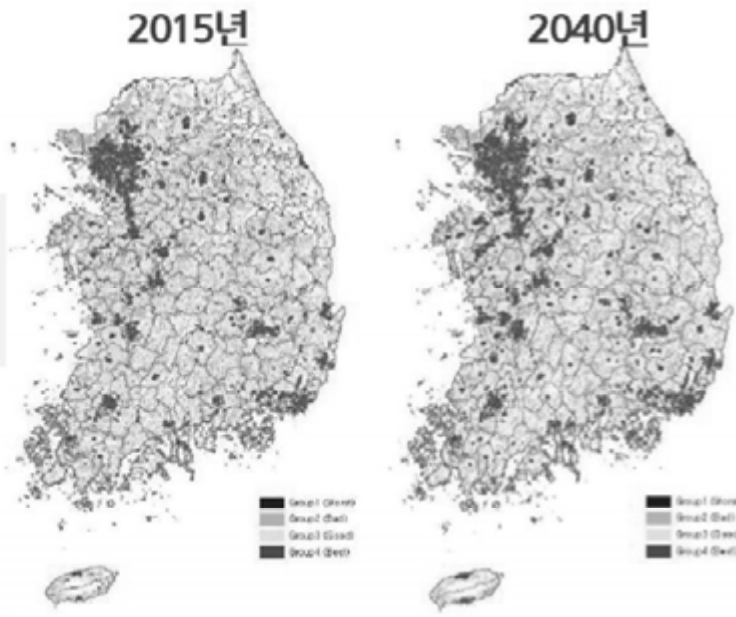
### 3 중앙부처 공동·협력적 지원 및 성과 모니터링

- 지역경제 평균 수준 이하 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
  - 지역지원 유형화 및 맞춤형 사업지원의 일정예산 배정
- 중앙부처 컨설팅 및 모니터링 강화
  - ※ 예시: 영국의 PSA(Public Service Agreements), LAA 등



## 참고 생활인프라 접근성 지수 분석

2015년 거주지역 가운데 생활취약지역(Life Desert) 면적 5.77% 차지, 일부지역 고착화 전망



생활인프라 포함시설: 학교, 편의점, 종합병원, 시장, 읍면의류시설, 약국

**참고** 지역 유휴시설·토지 및 노후인프라 재생 사례: Smart Decline

 <p>오하이오주, Youngstown</p>	 <p>강원도 평창군</p>	 <p>대구시 동구</p>
		
<p>유휴 공장부지를 녹지공간으로</p> 	<p>폐교를 지역주민 복합문화시설로</p> 	<p>폐역사를 주민도서관으로</p> 

## 지역간 협력·맞춤형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
- 지역 산업구조 전환 및 지역회복력 강화
  - 지속가능한 경제·생활공동체 기반 조성

### 1 지역 산업구조 전환 유도, 지역자산 활용으로 지역활력 증진

-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관광 진흥으로 체류·교류인구 증대 → 지역내 소비 및 주민소득 증대
  - ※ 예시 : 일본의 지방창생전략 및 광역관광주유루트 시책

- 조선, 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쇠퇴화에 따른 생산·고용감소 추세 가시화
  - 연안지역 입지 산업단지 449개 (전국의 39.9%), 입주업체 47,445개 (전국의 55%), 고용인원 1,103천명 (전국의 51%), 누적생산액 605.8조원 (전국의 62%)



조선소 선박수주 시장점유율 저하와 조선산업의 쇠퇴에 따른 폐조선소 발생

- 연안지역 등 기존 주력산업 집적지역의 경제위기 대응 필요

※ 현재 남해안 발전거점 조성계획 수립중(관광형 발전거점, 국토부)

## 지역간 협력·맞춤형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 2 지역유형·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역내 창업 및 기업가정신 촉구 지원, 도시이주 청년, 실버 대상 창업공간 제공
  - ※ 스타트업 기업 공동공간(co-working space) 조성 지원
- 친숙한 공동체만들기(AIP : Aging In Place) 전략으로 노인·주거복지·일자리 결합 확대

### 3 인프라 노후화에 대응한 도시·지역·농촌재생 확대 추진

- 공간통합적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확대로 도시쇠퇴 확산을 예방
- 지역내 유희토지·시설의 용도전환 및 공유경제 촉진 등 현명한 이용방안 강구
  - 그린인프라와 녹지화 전략, 일시적 활용, 적정규모화, 다운조닝 등

### 4 주변지역과 연계를 통한 서비스 공유 및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 복수의 지자체간 상생·공동발전시책 발굴 및 지원 강화

## 참고 일본의 지방창생전략: 지역-사람-일자리 창생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축소 극복을 위해 '일자리'와 '사람'의 선순환 확립, 이를 지원하는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

정기비전	주요수단(책)													
<table border="1"> <thead> <tr> <th>정책방위</th> <th>기본방향</th> <th>주요수단(책)</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사람과 일자리 창생의 선순환</td> <td>1. 지방에서 안정된 고용과 창조 (젊은 층 고용창출, 여성취업률, 재일외국인 관광소비액 등)</td> <td>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업종별 R&amp;D,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스타트업), 지방역 인재양성, 지방인재이탈 및 고령대역 ICT 활용으로 지역 활성화</td> </tr> <tr> <td>2. 지방에 새로운 사람의 유입 촉진 (지방이주권수, 기업에 지방거점 및 고용자수, 지방대학 진학률 등)</td> <td>지방이주 촉진, 일본형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구성의 추진, 기업의 지방거점 강화, 지방세제·원인 확대, 지방대학 등 활성화</td> </tr> <tr> <td>3. 젊은 세대의 결혼, 출산, 자녀교육 지원 (젊은 세대 취업률, 남성육아 유입률, 첫째자녀출산후 여성계속취업률 등)</td> <td>젊은 층 고용대책 추진, 임신, 출산, 자녀교육 지원, 일과 생활의 조화 실현(일하는 방식의 변화)</td> </tr> <tr> <td rowspan="1">선순환 지원, 마을 활성화</td> <td>4. 시대에 맞는 지역만들기 - 안전생활 유지 및 지역 간 연계 촉진 (작은거점수, 정주자립권 형성제권, 임차주택이게허수입, 종교·리조트시장 규모 등)</td> <td>작은거점(다세대주택, 다기능형 장의생활권) 형성 지원, 지방도시의 경제·생활권 형성, 공백회와 네트워크 형성, 연계중수도사업 형성, 정주자립권 형성 촉진, 대도시권의 안전생활 기반 확보, 기존 스톡(stock)의 관리 강화</td> </tr> </tbody> </table>	정책방위	기본방향	주요수단(책)	사람과 일자리 창생의 선순환	1. 지방에서 안정된 고용과 창조 (젊은 층 고용창출, 여성취업률, 재일외국인 관광소비액 등)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업종별 R&D,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스타트업), 지방역 인재양성, 지방인재이탈 및 고령대역 ICT 활용으로 지역 활성화	2. 지방에 새로운 사람의 유입 촉진 (지방이주권수, 기업에 지방거점 및 고용자수, 지방대학 진학률 등)	지방이주 촉진, 일본형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구성의 추진, 기업의 지방거점 강화, 지방세제·원인 확대, 지방대학 등 활성화	3. 젊은 세대의 결혼, 출산, 자녀교육 지원 (젊은 세대 취업률, 남성육아 유입률, 첫째자녀출산후 여성계속취업률 등)	젊은 층 고용대책 추진, 임신, 출산, 자녀교육 지원, 일과 생활의 조화 실현(일하는 방식의 변화)	선순환 지원, 마을 활성화	4. 시대에 맞는 지역만들기 - 안전생활 유지 및 지역 간 연계 촉진 (작은거점수, 정주자립권 형성제권, 임차주택이게허수입, 종교·리조트시장 규모 등)	작은거점(다세대주택, 다기능형 장의생활권) 형성 지원, 지방도시의 경제·생활권 형성, 공백회와 네트워크 형성, 연계중수도사업 형성, 정주자립권 형성 촉진, 대도시권의 안전생활 기반 확보, 기존 스톡(stock)의 관리 강화	인구감소문제(2016-2060년 1억명인구감소)의 심각성(전국시정) 성장역역(2060년 성장역역) 1.5-2% 유지
정책방위	기본방향	주요수단(책)												
사람과 일자리 창생의 선순환	1. 지방에서 안정된 고용과 창조 (젊은 층 고용창출, 여성취업률, 재일외국인 관광소비액 등)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업종별 R&D,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스타트업), 지방역 인재양성, 지방인재이탈 및 고령대역 ICT 활용으로 지역 활성화												
	2. 지방에 새로운 사람의 유입 촉진 (지방이주권수, 기업에 지방거점 및 고용자수, 지방대학 진학률 등)	지방이주 촉진, 일본형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 구성의 추진, 기업의 지방거점 강화, 지방세제·원인 확대, 지방대학 등 활성화												
	3. 젊은 세대의 결혼, 출산, 자녀교육 지원 (젊은 세대 취업률, 남성육아 유입률, 첫째자녀출산후 여성계속취업률 등)	젊은 층 고용대책 추진, 임신, 출산, 자녀교육 지원, 일과 생활의 조화 실현(일하는 방식의 변화)												
선순환 지원, 마을 활성화	4. 시대에 맞는 지역만들기 - 안전생활 유지 및 지역 간 연계 촉진 (작은거점수, 정주자립권 형성제권, 임차주택이게허수입, 종교·리조트시장 규모 등)	작은거점(다세대주택, 다기능형 장의생활권) 형성 지원, 지방도시의 경제·생활권 형성, 공백회와 네트워크 형성, 연계중수도사업 형성, 정주자립권 형성 촉진, 대도시권의 안전생활 기반 확보, 기존 스톡(stock)의 관리 강화												

지자체의 자립적이고 책임 있는 전략 수립과 국가의 지원

정보지원	재정지원	인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경제분석시스템(MEA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지자체의 산업·인구·사회지표가 함께 관해 있는 한 세이타 분석을 수행하고, 지역에 맞는 과제를 도출해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는 지역경제분석시스템을 정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합동발전회의 책정·집행의 재정적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방합생인(재)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 사임후에 국가정무원 연금 지급액 50% 보충</li> </ul> </li> <li>지방합생 공생후(재)원인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정촌 공생후 인가 후(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역 있는 후생정의 지원을 담당장부보 인입</li> </ul> </li> </ul>

##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추진시스템 개편·운영

### 1 포괄보조 예산제도 실질적 운영

- **현행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
  - 계정단위 포괄보조 예산지원방식 등 개편
    - 계정개편 예시 : 스마트혁신 계정, 포용성장 계정, 연계협력 계정
    - 단기적으로는 동일 사업군내 예산전용 허용 추진 및 확대 검토
- **지역 주도성 및 연계·협력 강화**
  - 지역연합 자율협상제도 도입
    - 시·군연합 주도의 일괄 자율협상 ; 지자체가 중앙부처 사업 선택, 역(逆) 세일즈 효과
- **지역발전 정책목표(성과)와 연계 강화**
  - 일자리 창출 등 핵심지표 연동제 운영
    - ※ 예시: 영국의 Devolution Deal과 Single Pot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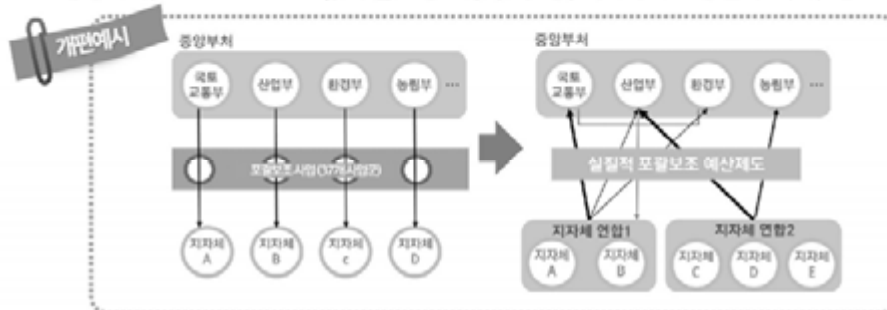
**개편예시**

	스마트혁신 계정	포용성장 계정	연계협력계정
목적	미래성장동력 인프라, 지역혁신거점 기반 스마트인프라 조성	National Minimum Wage, 사각지대 해소	지방분권 및 협력기반 조성
주요 분야	혁신공간 조성, 관광진흥인프라, SOC 등	생활인프라	지역간 연계·협력, 범부처 협력사업
편성 주체	지자체 (지역연합)	지자체 (지역연합)	복수의 지자체, 복수의 중앙부처(사업단위)
비고	-	차등지원제 적용	-

##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추진시스템 개편·운영

### 2 본권형 투자협상제도 도입·운영

- **현행 유명무실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 개선**
- **지자체 주도의 사업선택 및 자율성 확보**
  - 사업 공동기획,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예산지원 안정성 확보
- **지자체 예산운용의 책임성 강화**
  - ※ 영국의 분권협상(devolution deal) : 지역경제 촉진을 위해 도시권 단위로 지역연합(combined authority)을 설립하고 중앙의 기능과 권한을 지역맞춤형 방식으로 지원



## 참고 지역연합 자율협상제도 : 영국의 분권협상(devolution deal)

### ● 영국의 분권화 추진 동향

- 2015, 최초 '분권협상' 승인(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
- 2017, Combined Authority Mayor 선출

#### 분권협상 사업분야 예시

분야 (사업분야)	Corwall	Greater Manchester	Sheffield City Region
Transport(4개) - Smart ticketing	Y	Y	Y
Housing & public assets(4개) - Spatial planning - Housing investment fund		Y	Y
Further education & skills(4개) - Apprenticeship grant for employers		Y	
Employment Support(3개) - Work and Health Programme pilot		Y	Y
Business support(5개) - Growth Hub	Y	Y	Y
Health and social care(2개) - Integration of health and social care	Y	Y	
Police and Fire services(1개) - Mayor takes on police and fire services		Y	
Criminal Justice System(2개) - Commissioning of local criminal justice services		Y	
Water and coastal management(1개) - Integration of flood defence and water/coastal management		Y	

#### 분권협상과 포괄보조 예산(Single Pot) 운용 예시

Initial five-year allocations to the single pots of six local areas



#### 분권협상 승인 현황(1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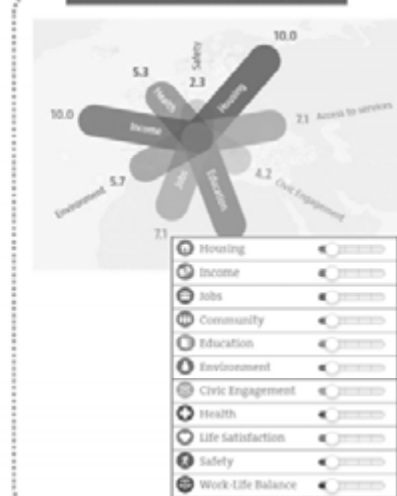


##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추진시스템 개편·운영

### 3 연계협력 촉진 추진체계 및 분권형 계획체계 개편

- 지역위(주관부처) 및 지역실행조직 개편
    - 중앙부처 수준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및 추진체계 재편
      - 범부처 협업 촉진 및 연계·조정기능 강화
    - 중앙-지방간 협력·소통 촉진 및 플랫폼 기능 수행
      - 중앙부처 지역실행조직의 기능·조직개편 추진(광역단위)
    - 범부처, 지역간 연계협력프로그램 발굴추진 확대
  - 인구감소·저성장, 분권화 대응 지역계획 체계 개편
    - 지역이 주도하는 자율적 계획 수립·운영
    - 분권형 균형발전 측정지표 개발 및 진단모니터링 추진
- ※ 예시 : OECD Better Life Initiative(BLI)

#### OECD의 BLI 지표 예시





# 감사합니다

(mscha@krihs.re.kr)



2017년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 균형발전 선도거점 육성을 위한 혁신도시 활성화방안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류승한 산업입지연구센터장

김진범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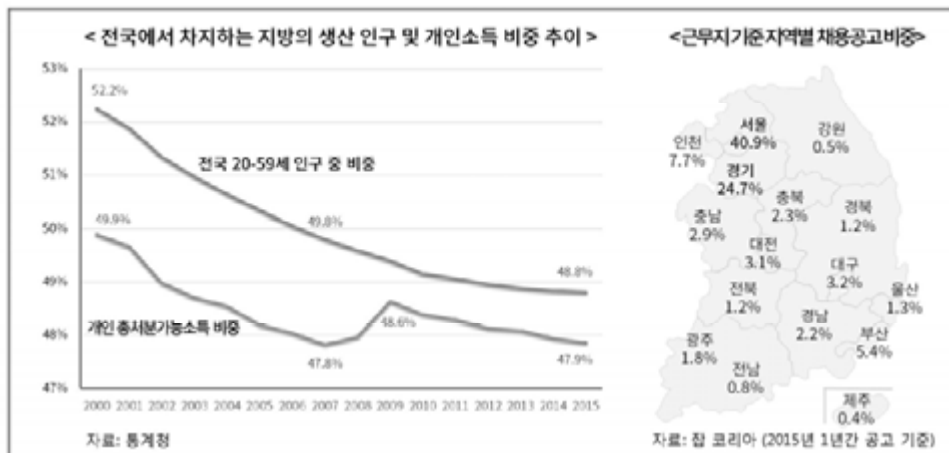
## 차례

- I.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 거점 육성의 필요성
- II. 혁신도시 10년의 성과와 평가
- III. 혁신도시 과제와 발전방향
- IV. 혁신도시의 균형발전 선도 거점화 방안

# I. 균형발전을 위한 선도 거점 육성의 필요성

## 1. 균형발전 선도거점 육성 필요성

- 지속적 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현실은 여전히 취약
  -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현실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국가 성장역량 감소, 인구성장 둔화 등에 따라 수도권 규제를 통한 지역발전정책의 효용에 대한 의구심도 증가



## 1. 균형발전 선도거점 육성 필요성

- 기존 지역역량 강화 사업의 효과 미진
  - 단위사업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전체로서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 구축에는 한계
  - 개별 사업이 소규모로 산재 되어 거점 역할 담당을 위해 필요한 규모 확보 부족
  
- 실효성있는 균형발전거점 육성 필요
  - 지방의 자립성장을 이끌 수 있는 발전거점을 집중 육성하고 그 성과를 주변지역에 확산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필요

### 지역혁신역량강화사업

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창조경제혁신센터  
 첨단의료복합단지  
 기업도시  
 연구개발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산업클러스터 구축  
 ...

### 균형발전관련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혁신도시건설및지원특별법  
 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지역특화발전특구법  
 ...

## 2. 균형발전 선도거점으로서 혁신도시의 잠재력

- 혁신도시는 지역경제발전과 도시발전의 자립화 모델

- 이전공공기관과기업대학·연구공공기관등의기관이 긴밀하게협력할수있는혁신여건과수준높은정주환경을갖춘미래형도시(혁신도시특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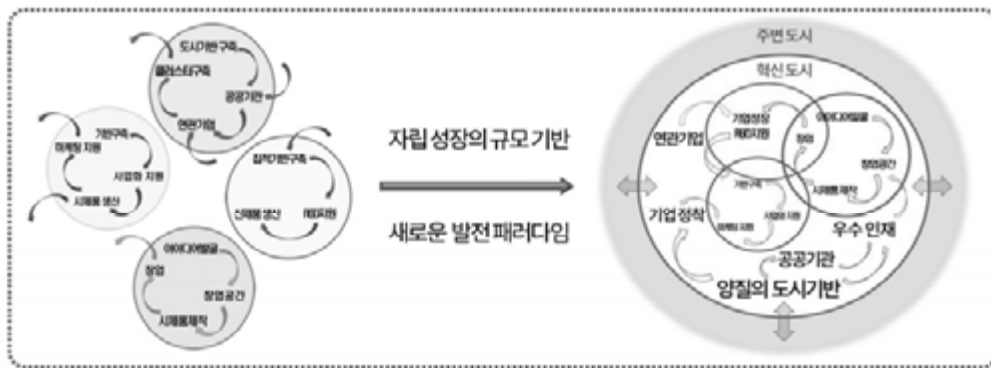


- 균형발전이이끌어갈수있는자립성장역량을갖춘 새로운성장모델이자우수인재들이살고싶어하는 정주여건을구비한새로운도시모델



## 2. 균형발전 선도거점으로서 혁신도시의 잠재력

- 혁신도시는 분산된 여러 정책을 종합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적 기반
  - 혁신도시는 도시의 입지나 위상 등에서 국토 및 도시개발 정책,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을 공간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최적의 공간적 기반을 제공
  - 사업 중심의 지역혁신정책을 지역 중심으로 결집함으로써 전체로서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촉진하고, 광역적 발전을 이끄는 선도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가능



## II. 혁신도시 10년의 성과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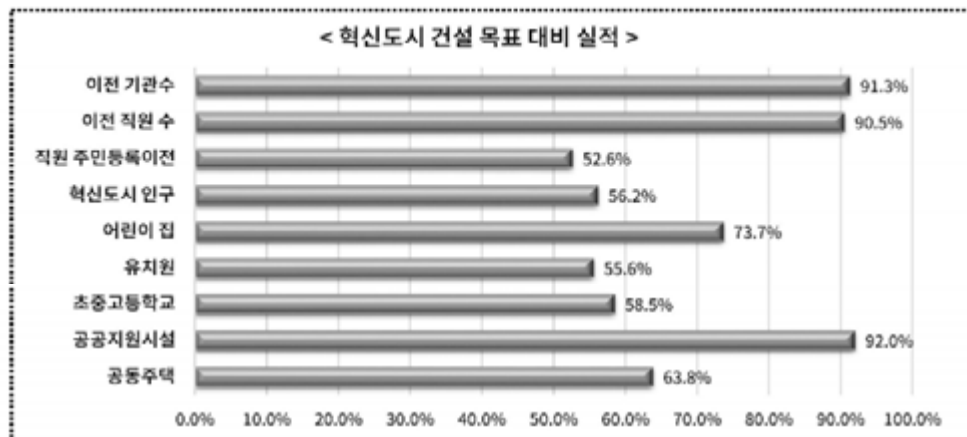
## 1. 혁신도시 현황



## 2. 혁신도시 10년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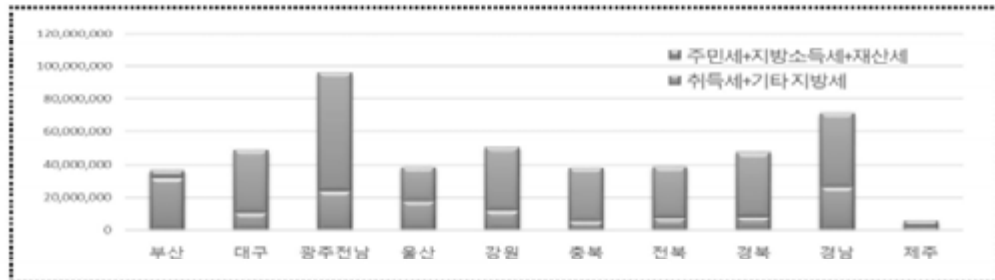
### ■ 주요지표 별 목표대비 실적

-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완료단계에 들어섰으며 공공기관 및 종사자 이전, 인구 규모, 공공지원시설 건설 등은 순조롭게 진행
- 혁신도시 지역의 지방세수 및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도 점진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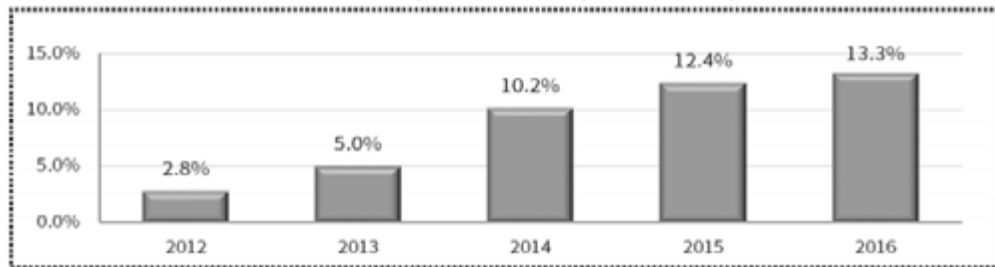


## 2. 혁신도시 10년의 성과

- 혁신도시 지방세 납부 현황: 2016년 약 4,714억원 규모



- 지역인재 채용: 2016년 13.3%(109개 기관 1,333인 고용)로 지속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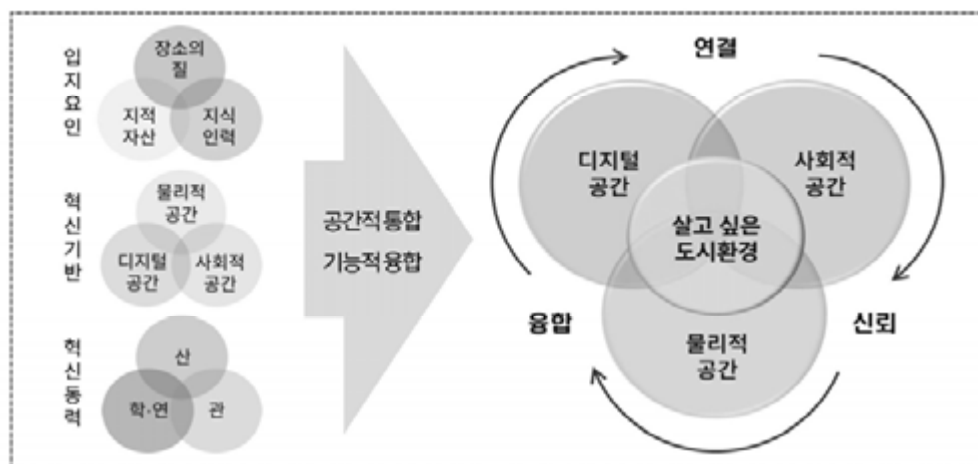
## 3. 혁신도시 성과의 평가

- 도시 건설의 성과에 비해 혁신도시 정책 목적 관련 성과는 미흡
  - 인구유입에 수반되는 공공시설 설치는 착실히 추진되고 있으나 인재의 지역 정착 및 수도권 인구의 유입이 가능한 내실 있고 우수한 정주기반 구축은 미흡
  - 지역대학과의 협력이나 연관 기업 유치의 지연과 관련 지원체계 미흡
  - 산학연 연계를 통한 혁신클러스터의 구축 및 신규 일자리 창출 기반 미정비
- 도시건설에서 도시발전으로의 정책적 전환 필요
  - 혁신도시는 주택공급이 아니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토지분양이나 인구 증가로 성공을 판단하기 곤란
  - 공공기관의 이전과 도시 건설이 완료단계에 달함에 따라 자립적 발전을 위한 균형발전 거점 형성이라는 본연의 정책 목적 달성 방안 마련 필요

### III. 혁신도시의 과제와 발전방향

#### 1. 균형발전 선도 거점으로서 혁신도시의 과제

- 균형발전 선도 거점으로서 혁신도시의 역할: ① 혁신 자산의 **견인** ⇒ ② 집적을 통한 **성장** 과 발전 ⇒ ③ 주변지역으로의 성과 **확산**과 상생발전
- 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서 나아가 양질의 도시환경과 혁신기반을 구축하고, 그 위에 서 산·학·연이 교류·협력하면서 주변지역의 동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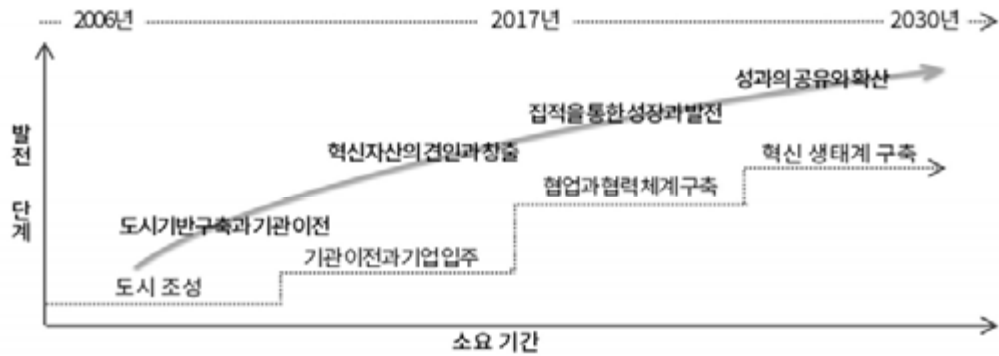
## 2. 혁신도시 발전의 기본방향

### 기관 이전과 도시건설 (혁신도시1.0)

- 공공기관 이전 및 도시의 외형 건설
- 공공기관 및 인구증가에 유발된 일자리
- 도로 등 물리적 기반시설 확충
- 혁신도시 내부적인 정비
- 도시건설과 기관이전 중심 거버넌스

### 균형발전 선도거점화 (혁신도시2.0)

- 자립발전 역량을 갖춘 **일자리생태계** 구축
- 창업 등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
- **스마트·혁신 인프라+도시 에너저티** 확충
- 기존 도시와의 **상생발전** 및 성과의 확산
- 혁신도시발전과 거점화를 위한 **거버넌스**



## IV. 혁신도시의 균형발전 선도 거점화 방안

## 1. 창업 및 일자리 생태계 허브 구축

### ①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특성화된 일자리 생태계 구축

- 공공의 선도적 투자를 통한 창업 및 기업성장 기반 구축
  - 지방의 취약한 창업 및 기업성장 역량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을 고려한 특성화된 창업 및 성장 기반을 공공 주도로 공급
- 기업등의 혁신도시 내 입지에 대한 지원강화
  - 이전공공기관산하기관, 기업등의 혁신도시 이전 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에 준하여 자금 및 세제 지원 확대
- 혁신도시 별 특성과 연계한 맞춤형 R&D 지원
  - 공공기관 기능과 연계된 특성화된 R&D 지원 확대
  - 부처간 협업으로 공공기관과 지역대학 및 지역기 업의 공동 R&D에 대한 우대제도 도입



## 1. 창업 및 일자리 생태계 허브 구축

- 지역 창업·일자리 생태계에 있어 공공기관의 선도 기능 강화
  - 구매조건부 R&D, 개발 제품 및 서비스의 우선 구매, 조달에서의 지역기업 평가 우대 방안 도입
  - 공공데이터나 비즈니스 솔루션 등 공공기관 보유 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공급
  - 공공기관과 연계된 혁신도시 특성화 지원(예시: 전북혁신도시의 도시형 스마트 팜 구축 사업)
  - 공공기관 등의 지역경제발전 및 지역일자리 창출 의무를 강화하고, 그 실적을 평가
- 고가 공동이용장비의 집적화 및 이용 지원
  - 지역 대학,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동이용장비를 단일의 건축물 내에 집적하여 기업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가상 인큐베이터(virtual BI) 및 가상 산업단지 플랫폼 구축
  - (예비)창업기업의 비즈니스 솔루션 지원을 위한 가상 BI 설치 및 주소지 등록 서비스 제공
  - 혁신자원의 광역적 공동 활용을 위한 '가상 산업단지' 플랫폼 구축

## 1. 창업 및 일자리 생태계 허브 구축

### ② 아이디어 및 현장형 창업의 지원거점 구축

- 혁신도시의 주요 거리와 공공 공간을 적정기술 기반의 현장형 창업공간으로 활용
  -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현장형, 아이디어 기반의 창업지원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와 역량에 부합하는 창업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창업생태계의 다양성을 제고
  - 혁신도시의 주요 거리와 공공 용지 등을 활용하여 문화활동과 시민 창업이 가능한 복합형 창업공간을 확충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
-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협업을 통한 현장형 창업 지원강화
  - 지역내 유통기업 등과 협력한 마케팅 지원, 이전공공기관과 협력한 기업경영 솔루션 지원 등의 지원조치를 마련하여 기업의 성장과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지원
  - 지역창업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우선 구매 제도 도입

## 1. 창업 및 일자리 생태계 허브 구축

### <서울 숲 '언더스탠드 예비뉴' 사례>

- 서울시 서울숲 진입로에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대지 4,126㎡의 공간에 116개의 컨테이너로 조성
- 롯데면세점과 비영리단체인 ARCON 및 서울시 성동구의 협력으로 설치하고 지원
- 116개의 컨테이너는 각각의 가치를 담은 7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창업과 문화공연 시설 외에 청소년, 예술가, 사회적기업가의 사업화를 지원



### <고려대학교 π-Ville 99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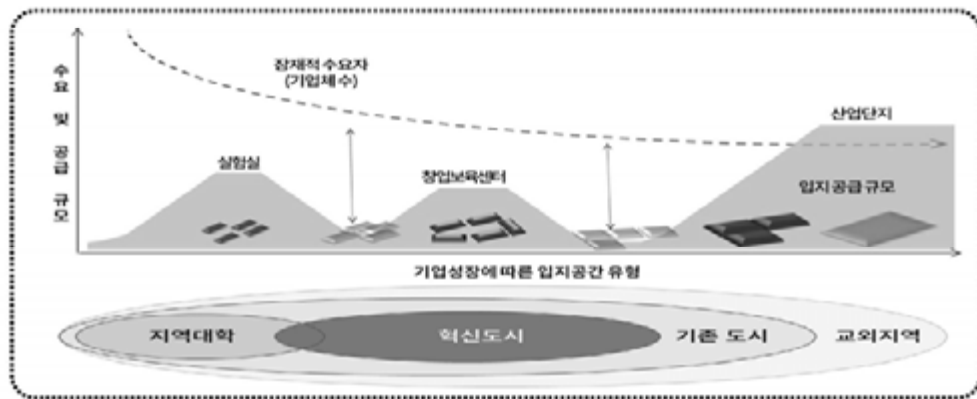
- 대학 내 1,524.98㎡의 부지에 총 38개의 컨테이너로 이루어진 지상 5층 규모 건물로 2016년 준공되었으며, 15개의 스튜디오, 강당, 오픈플랜 스튜디오, 아이디어 카페, 3D프린터 오픈랩 등으로 구성
- 창업 입주 신청자에게 높은 수준의 완결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구체성을 갖춘 사업 아이템으로 외부의 지원을 받을만한 이들은 배정 대상에서 제외



## 2. 창업과 성장의 공간기반 확충

### ① 기업 생애 주기적 입지 지원을 통한 기업입지 사각지대 해소

- (예비)창업-성장-성숙 모든 단계에 걸친 입지 지원으로, 혁신도시의 입지 **사다리 기능** 강화
  -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업공간(livingLab)**과 Pop-Up Shop 건립 및 운영 지원
  - 비졸업기업의 지역내 성장과 정착을 위해 미분양 클러스터 용지를 활용한 **Post-BI** 제공
  - 민간의 협업공간 및 Post-BI 공급에 대한 토지용도 및 개발밀도 변경 허용



## 2. 창업과 성장의 공간기반 확충

### ② 지역대학 등과 연계한 ‘캠퍼스 산업단지’ 등의 개발 지원

- 대학 부지 내 기업입지시설(가칭 ‘캠퍼스 산업단지’) 설치 지원
  - 혁신도시 특성화와 연계한 기업지원 및 입지시설 확충을 위해, 지역대학이 대학부지 및 인근 유휴국·공유지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 그 개발을 허용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
- ‘캠퍼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혁신도시내 입주기업에 준하여 지원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기능지구 개념을 혁신도시에 도입하여 지원

#### < 영국 University Enterprise Zones 사례 >

- 대학과 지역 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로서의 역할 강화 및 소규모 신생기업 육성을 위한 시설 개발을 위해 영국정부가 도입한 사업으로 2014년~2017년까지 시범사업에 6개 대학 참여
- 지역 성장을 위한 대학의 협력 촉진, BI 운영, 중소기업에 위한 성장 거점 마련 등을 지원
- 대학과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 간의 산학협력 활성화 및 중소기업 성장 거점 마련
- UEZ는 비즈니스지원 패키지와 전문시설 및 대학에서 제공하는 전문지식을 이용할 수 있음

### 3. 지역인재 양성과 채용의 선순환체계 구축

- 공공기관과대학의협업으로지역인재양성과채용의선순환구조구축
  -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제고**를 위하여 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체계** 구축
- 인력양성을위한계약학과및공공기관별인력양성트랙설치촉진
  - 이전 공공기관 연계형 대학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대학 특성화 지원
  - 공공기관과 연계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및 '**재교육형 계약학과**' 확대
- 공공기관·기업(인력양성)트랙에대한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지원강화
  - 교육부 LINC+ 등 정부의 관련 정책에서 혁신도시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우대
  - 지자체 주도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참여 기관 및 기업에 대해 자금지원 우대 조치 도입

※ 경상남도의 '경남형 기업트랙'에 대한 자금지원 우대 기준 등 참조

### 4. 혁신도시의 스마트시티화 및 정주여건 확충

#### ①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지정

- 삶의 질 증진과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추진
  - 혁신도시를 부처 협력에 의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공공기반시설 및 도시 공간 전체에 대한 고품질의 생활 및 혁신 인프라 구축 추진
- 스마트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존 도시와의 연결성 및 통합성 제고
  - 대중교통, 정보통신 분야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존 도시와의 연결성과 통합성을 제고하고, 혁신도시 어메니티 시설에 대한 모든 시민의 **이용편의**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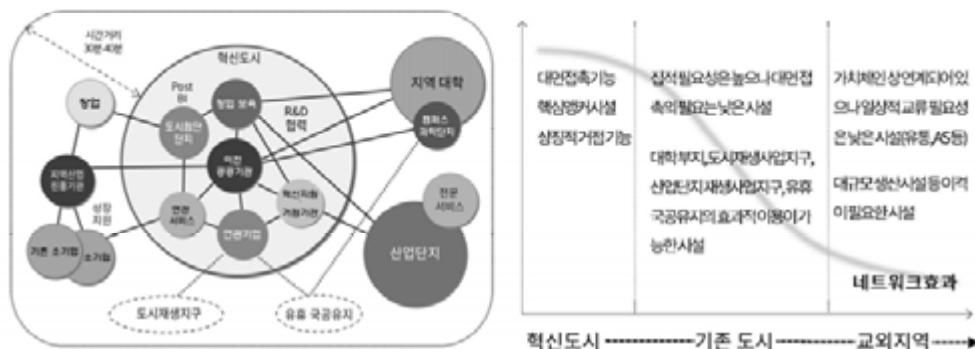
## 4. 혁신도시의 스마트시티화 및 정주여건 확충

### ② 양질의 매력 있는 정주기반 구축

- 시민의 삶의 질 증진과 우수인재의 지역 정착을 위한 도시적 어메니티 확충
  - 교육, 의료, 복지 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문화공간 등 각종 도시적 어메니티 시설의 조기 설치 추진
- 시민이 ‘만들어가는 도시’ 구현을 위한 사회적 실험 강화
  - 시민 주도의 ‘도시 만들기’ 추진으로 시민의 주인의식 제고, 도시 내 자원의 활용도 제고, 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관리 등을 통해 장소의 질적 수준 향상
- 혁신도시의 삶의 질 모니터링을 위한 ‘혁신도시형 도시 질’ 지표의 개발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의 목적을 반영한 ‘도시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

## 5.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 혁신도시와 주변지역간의 기능 분담에 의한 창업·일자리 생태계 구축
  - 혁신도시를 지역일자리생태계의 허브로 육성하고, 주변지역과의 기능분담 체계 구축
  - 혁신도시 내에는 지방도시에 입지가 어려우면서 공간적 근접의 효과가 큰 기능을 중심으로 집적하고, 그 외의 기능은 기존 도시 개발과 연계한 입지를 유도



## 5.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기반구축

- 기존 도시내의 주요 도시정비 사업과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연계 추진
  - 기존 도시내의 도시재생사업 지구,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역대학 내 유허 부지 및 유허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협업공간 등 연계 거점 구축
  - 도시재생사업이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지구 선정 시 혁신도시와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필요성 등을 고려한 우대 조치 도입
- 혁신도시와 주변 대단위 산업집적지와의 연계 협력 체계 구축
  -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산업단지나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 집적지를 연계하여 지원하기 위한 관리조직 간의 협력체계 구축
  - 이전 공공기관 연관 기업 유치에 위한 산업입지 공동개발, 기업투자 유치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

## 6. 혁신도시 거버넌스 정비

- 혁신도시 추진 정부조직의 기능을 도시건설에서 도시발전으로 전환
  - 도시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중심 추진조직을 혁신도시 정책 전환에 따라 혁신 도시 발전 지원기구로 개편
  - 관련 부처 간 협력과 혁신도시 간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정 기구의 역할 강화
- 혁신도시 개발과 진흥을 전담할 혁신도시별 실행조직 설치
  - 혁신도시 건설과 도시관리·경영 및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실행 조직을 각 혁신도시별로 설치
  - 실행 조직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간 매개조직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혁신도시의 특성화발전 지원, 정주기반과 산업혁신기반 구축,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추진 등을 전담
  - 실행조직 의사결정에 공공기관과 산업지원기관 등의 참여를 확대하여 사업의 현장성 제고



**감사합니다**

(shryu@krihs.re.kr)



2017년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국토전략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이재용 스마트·녹색도시연구센터장

이백진 첨단인프라연구센터장



## 차례

- I. 스마트시티 도입 배경
- II. 국내 추진 현황 및 한계
- III.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국토 기본방향
- IV. 스마트국토 추진전략



## 1.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

### ■ 4차산업혁명의 도래와 스마트시티

-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 산업 수요는 데이터 및 혁신적 아이디어가 집적되는 도시공간에서 발생
  - (Richard Baldwin) "20세기 공장이 하던 역할을 21세기에는 도시가 수행할 것이며 향후 도시정책은 산업정책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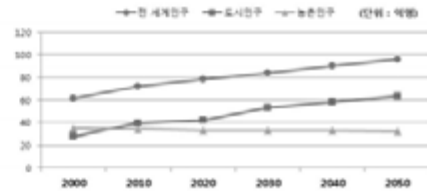
	농업혁명 (BC 3000)	1차 산업혁명 (1782)	2차 산업혁명 (1913)	3차 산업혁명 (1954)	4차 산업혁명 (2015)
기술 발전	농업의 산업화	증기기관	대량생산을 위한 전력사용/ 컨베이어벨트	컴퓨터 제어/ 인터넷 등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도시 공간	물리공간상의 집적	물리공간상의 일체적 집적		가상공간 출현	가상 및 물리적 공간 통합·연계
신산업 창출 역할	-	공장	발전소	삼리코벨리 등의 산업클러스터	도시공간

- 스마트시티는 "플랫폼으로서의 도시" 로 저성장 New Normal 시대 대응 수단으로 주목
  - 플랫폼으로서의 도시: 도시가 경제활동 및 고용 중심이 되기 위하여 기술, 제도, 사회적 측면에서 개방성 및 연결성을 갖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스마트시티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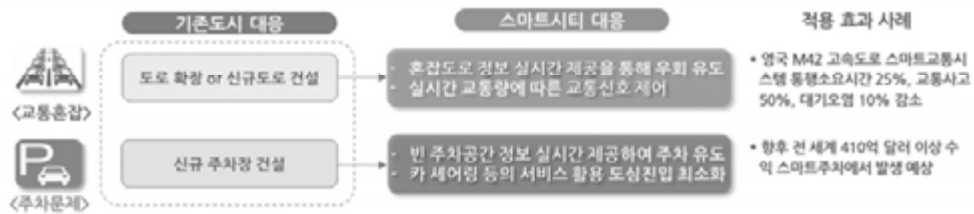
## 2. 도시문제 해결 수단

### 도시문제 해결 필요성과 스마트시티

- 전 세계 인구는 2050년 약 95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 중 약 67%가 도시 거주(UN, 2014)
- 최근 도시화는 과거 서구 도시화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현재의 인프라 구축 기반의 도시문제 해결 방식은 자원적 한계로 인하여 어려움 심화



- 신흥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공공 자원의 한계로 도시 내 인프라 구축 확보가 불가능해 투자대비 효율성 높은 스마트시티 모델 확산
- 선진국의 경우 도시 노후화 및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로 스마트시티를 채택



## II. 국내 추진 현황 및 한계

# 1. 국내 추진 현황

- '08년 U-City법 제정 후 제도 및 계획, 기술개발을 위한 R&D, 인력양성, 시범사업 등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첨단인프라 구축 및 확산 측면의 성과는 일정부분 달성

('00~'08) 스마트시티등장 및 구축	('08~'14) 제도 마련 및 전국 확산	('14~'17) 정보연계 및 거버넌스 도입
<p>✓ 동탄, 판교 등 U-City 구축을 시작하여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제도적 기반 마련</p> <p><b>신형 신도시 및 혁신도시 중심 스마트시티 등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성동탄('03)을 시작으로 송도, 판교 등 제2기 신도시 및 혁신 도시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구축</li> <li>· 기 구축된 고속정보통신망 인프라와 신도시 공간 및 재원을 결합하는 스마트시티 모델 적용</li> </ul>	<p>✓ U-City 종합계획, 기술개발 투자 등 신도시 중심의 U-City 지원 정책 시행으로 스마트시티의 전반적 기반 구축</p> <p><b>스마트시티 제도기반 마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City법 제정(2008), 제1차 U-City종합계획 수립(2009), U-City 관련 지침 수립(2009)</li> </ul> <p><b>스마트시티의 확산 추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R&amp;D 사업을 통해 통합플랫폼 등 기술개발과 U-City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스마트시티의 전국적 확산 추진 (전국 50여 개 지자체에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추진)</li> </ul>	<p>✓ 인프라 구축 중심에서 통합플랫폼 보급 등을 통한 정보 및 시스템 연계·통합 중심으로 정책 전환</p> <p><b>통합플랫폼 기반 정보 및 시스템 연계·통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연계·통합의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플랫폼 보급 사업 추진</li> </ul> <p><b>거버넌스 도입</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 국보부를 중심으로 미래부, 산업부, 행자부 등 범부처적 성격의 스마트시티 추진단 구성</li> <li>· (연관) 미래부는 부산시·SKT 컨소시엄으로 스마트비즈니스 모델 실험사업 지원</li> </ul>
		

# 2. 기존 사업의 한계

- 신도시 개발과 ICT 인프라 기술을 결합한 기존 스마트시티 사업에서는 첨단인프라 및 서비스 구축·확산을 일부 달성하였지만 사업의 한계점 역시 존재

<p><b>첨단인프라 구축 위주의 사업 성과</b></p>	<p>· 첨단인프라 구축 위주의 단편적 사업 추진으로 신성장동력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의 역할 등 스마트시티의 다변화된 역할 수행 미흡</p>
<p><b>신도시와 혁신도시 중심의 투자</b></p>	<p>· 도시문제가 상대적으로 없는 혁신도시와 신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문제 해결형 솔루션을 보급하고 쇠퇴도시 및 구도심 지역은 자원부족으로 추진 미흡</p>
<p><b>개별적·단절적 사업 시행</b></p>	<p>· 스마트시티의 융·복합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제도 및 조직체계, 사업들의 통합 관점 부족</p>
<p><b>사업성과의 확산 및 홍보 실패</b></p>	<p>· 시범사업 추진 후 사업 성과 관리 미흡으로 사업종료 후 실사업으로 연계 또는 지자체 확산에 실패하고 국내 성과의 대내외 홍보 부족으로 세계적 인지도 역시 낮은 실정</p>

### III.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국토 기본방향

## 1. 여건 변화 및 역할의 증대

### ▪ 국내 스마트시티 여건 변화 및 역할 증대

#### 4차 산업혁명 주도와 뉴 노멀 시대 대비

저성장  
뉴 노멀 시대

• 향후 10년간 잠재성장률 2%대 하락 전망

실업률 증가

• 청년실업률의 지속적 증가  
(09년: 8.1% → '15년: 9.2%)

4차 산업혁명

•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준비도에서 한국은  
25위에 불과

#### 급증할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 수단

저출산  
고령화

• 출산율 저하, 평균 수명의 증가로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

쇠퇴 도시  
증가

• 2013년 거주지역 중 2040년 인구감소지역  
52.9%

기반시설 일계  
규모 부족

•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기반시설 수요  
감소와 일계규모 부족으로 신규시설 공급 불가

- 4차 산업혁명 및 도시 문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도시모델 필요성 확대
- 기존 방식의 도시정책 추진이 한계를 보이는 반면, 일자리 창출과 도시민 삶의 질에 대한 기대감으로 스마트시티 모델 역할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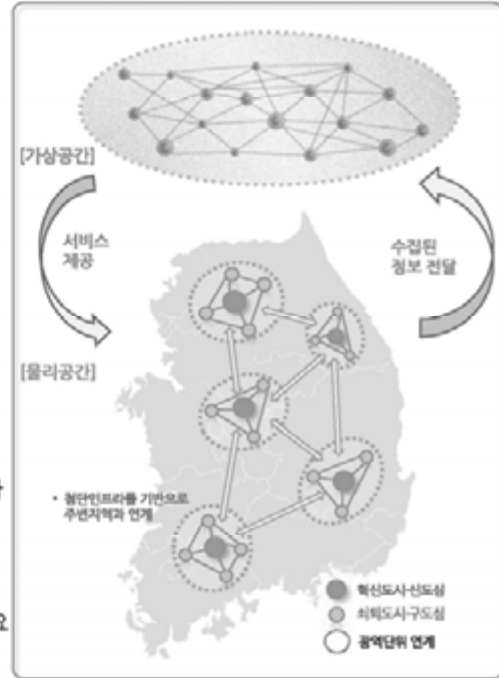
신도시의 물리적 인프라 구축 중심 스마트시티 정책에서

쇠퇴도시와 가상공간까지 확장하는 스마트국토 정책으로 전환 필요

## 2.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국토

### ■ 스마트국토의 공간요소

- 기술적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국토 조성은 가상공간과 물리공간 사이의 연결성 및 상호작용 강화를 기반으로 함
- [가상공간] 물리공간상 수집된 정보 통합, 연계, 분석 및 예측과 결과의 물리공간 피드백 역할
- [물리공간] 물리공간 상 정보수집, 가상공간으로 정보전달, 정보 기반의 서비스 구현 역할
- 첨단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혁신도시 및 신도심**과 도시문제가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쇠퇴도시와 구도심** 등 물리공간의 상태 및 요구사항 등의 차이를 고려한 **공간 맞춤 정책** 필요
- 행정구역 단위의 단절된 스마트시티 정책에서 지역 간 기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를 **광역 단위로 연계·확대** 필요



## 3. 스마트국토 기본 방향

###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 공간 조성

- 4차 산업혁명과 뉴 노멀 시대를 대비하는 기회 창출형 스마트국토전략 추진

### 2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생 공간 조성

- 도시의 문제를 저비용 고효율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결하는 비용 절감형 스마트국토전략 추진

### 3 스마트인프라의 광역적 연계

- 첨단인프라 구축 지역 중심으로 주변 쇠퇴지역 및 구도심을 연계하는 지역격차 해소 전략 추진

### 4 데이터 기반 스마트 가상공간 구축

- 혁신적 일자리 창출 및 도시문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중심 가상공간 구축

## IV. 스마트국토 추진전략

### 1. 일자리 창출 위한 혁신 공간 조성

- 도시 빅데이터 및 첨단인프라가 갖추어진 도시공간을 스타트업 창출 플랫폼으로 활용



# 1. 일자리 창출 위한 혁신 공간 조성

## ■ 산업클러스터+테스트베드 형 지역산업 특화단지 조성

- (특화단지) 첨단산업클러스터 + 테스트베드
  - 우수 스타트업에 대하여 지역산업 특화단지 입주 지원
  - 테스트베드 활용으로 산업클러스터의 성과물의 도시공간 실증



## • (예시) 미래형 스마트 교통체계(Smart Mobility) 특화 단지

-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셔틀/ 차량-인프라 연계 등 첨단 자동차 개발을 위한 특화단지
- 혁신도시 내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
  - 친환경자율주행 차량 Smart Factory, 정밀지도, 차량센서, 차량인프라 통신, 인간공학 등
  - 관련 스타트업 기업 유치 및 현장 테스트베드 제공



# 2.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생 공간 조성

## ■ 도시문제 해결형 솔루션 발굴 및 도입

- 무조건적인 최첨단 인프라 도입 지양,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당면 과제에 집중한 최적 솔루션 도입
- 즉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맞춤형 솔루션 확산 지원으로 조기 성과 달성
- (예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소규모 재정부자로 조기도입 가능한 화재센서, 24시간 감시시스템 도입



대구서문시장

소래유구

구려시장

## ■ 첨단인프라의 다목적·융합 활용으로 저비용의 고효율 운영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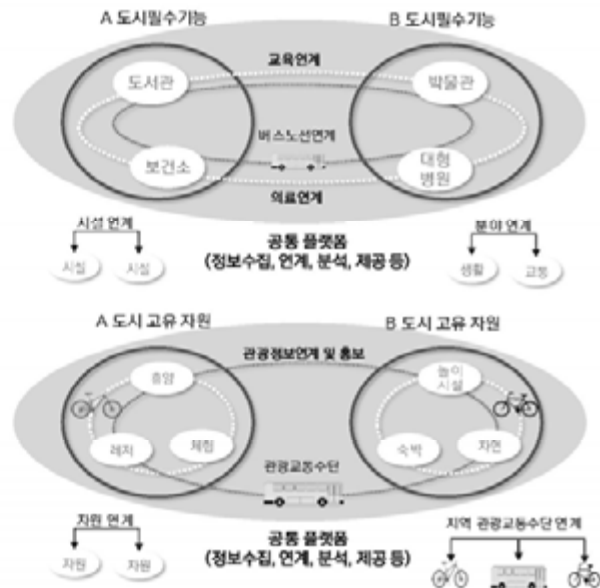
- 단일 목적으로 설치된 CCTV, 센서 등 첨단인프라의 활용범위를 다각화하여 구축비용 대비 효율성 증대
  - (방범 → 화재) 방범 CCTV의 주택가 화재 감시 활용 (교통 → 범죄) 교통 CCTV의 범죄 차량추적 활용
- 단일 목적 서비스들의 연계·통합으로 추가 비용 없이 새로운 연계 서비스 발굴
  - (교통+방범) 둔치주차차량에 하천범람 알림 서비스 → 연평균 13.8억원 재산피해 예방



## 2.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재생 공간 조성

### ■ 지역 간 첨단인프라 및 정보 연계를 기반으로 도시기능 분담

- 지방도시들의 연계·협력을 통해 건강, 문화, 교통, 복지 등 삶의 질을 보장하는 첨단 인프라 구축
  - 지역별 부족한 도시필수 기능을 갖는 시설물 연계활용, 의료시설 연계 등 지원
- 지방도시들의 연계·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첨단 인프라 구축
  -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 자원을 공유하여 관광 등 지역상생발전 유도



## 3. 스마트시티의 광역적 연계·확대

### ■ 스마트인프라 및 도시정보의 광역적 연계

- 행정구역 및 사업구역 중심의 스마트시티 추진으로 발생하는 정보 및 서비스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첨단인프라가 구축된 혁신도시-신도시의 도시통합운영센터 등과 주변 쇠퇴도시-구도심을 연계하여 광역권으로 관리
- 쇠퇴도시-구도심 지역의 낙후된 인프라 개선사업 시 인접한 혁신도시-신도시 지역의 첨단 인프라와 연계 유도 및 도시정보의 통합 관리
  - \* '대전시의 노후 인프라 성능 개선사업 시 통합센터와 연계' 및 '인천시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개발과 도심재개발 사업 연계' 등과 같은 사례의 제도적 지원 및 광역권으로 확대



## 4. 데이터 기반 스마트 가상공간 구축

- 스마트 가상공간 - 서비스 제공과 비즈니스 창출의 필수 요소인 도시정보 관리 역할

2017년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국토 전략 | 19

## 4. 데이터 기반 스마트 가상공간 구축

- (도시정보 수집) 첨단 인프라 시설 기준 마련
  -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첨단 인프라 시설의 설치 기준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기준 마련
  - 시설들의 공간적 특성(광역시설, 행정구역 내 시설 등)과 요구되는 기능(안전, 효율, 편리 등), 지능화 시급성 등을 고려한 확충 우선 순위 등 확산 기준 마련

- (도시정보 통합) 정보 연계·통합 기준 마련
  - 첨단 인프라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상호 연계하고 통합할 수 있는 데이터 포맷 및 표준 마련
  - 개별 서비스에서 파생되는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표준 플랫폼의 보급 및 확산

2017년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국토 전략 | 20

## 4. 데이터 기반 스마트 가상공간 구축

- (도시정보 개방) 도시정보 유통 체계 및 개방형 플랫폼 구축
  - 도시정보의 민간개방 확대를 목표로 정보 유통 체계 구성
    - 기존 조직의 확대(공간정보산업진흥원의 브이월드 등) 개편 또는 신규 조직 구성 등 도시정보 유통 조직 구성과 도시정보 유통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마련
  - 도시정보 개방형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서비스제공을 위해 수집된 도시정보 민간 개방을 위한 원스톱 형태의 개방형 플랫폼 구축



◀World의 공간정보 데이터 운영관리▶



◀Virtual Singapore 프로젝트를 통한 도시데이터 운영관리▶



## 5. 스마트국토 지원 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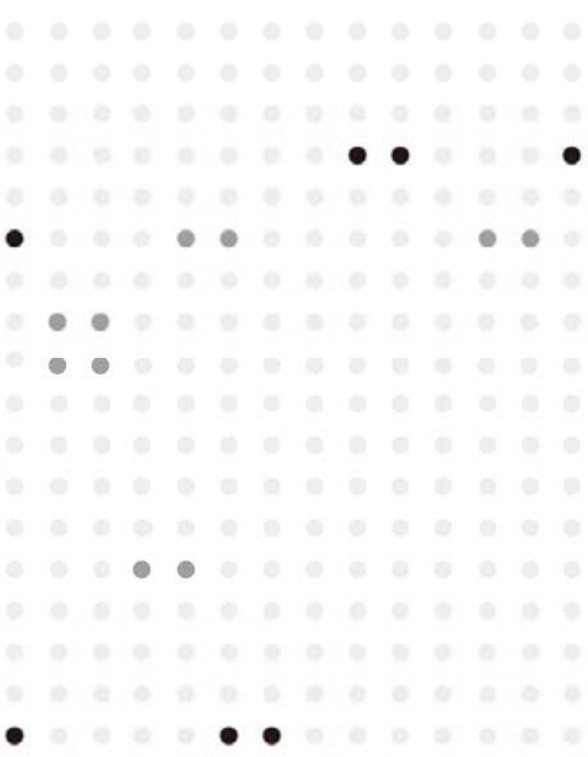
- 스마트시티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관리 체계 마련
  - 성과의 객관적 측정을 위한 스마트시티 모델 기준 정립 및 수준 진단 추진
  - 부처간 거버넌스 조성 및 사업성과 관리를 위한 스마트시티 범 부처 사업 연감의 발간
- 스마트시티 성과 확산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성과모델 확산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지자체 중심의 국내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
  - 국내 우수 성과의 글로벌 홍보를 위한 글로벌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가입 지원 및 글로벌 지표 대응
    - \* 대표적 글로벌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는 Smart Cities Council, 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s, Global City Teams Challenge Super Cluster 등
  - 국제적 영향력 강화를 위한 정기적 글로벌 포럼 개최
  - 최근 다양하게 논의되는 스마트시티 글로벌 표준 선정
    - \* 스마트시티 글로벌 표준 조직이 다양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국토부, 미래부, 산업부의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마련 필요 (ISO-국토부) 프레임워크, 계획, 평가, 물리적 기반시설 등에 대한 표준 대응 (ITU-T-미래부) ICT 프레임워크, 네트워크, 통신표준 등에 대한 표준 대응 등
- 범부처 차원의 스마트시티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 국토부, 미래부, 행자부 등 관련 부처 간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및 사업 공동 추진
    - 특히, 국토부는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솔루션들이 통합·연계될 수 있도록 가상공간(플랫폼 등)과 물리공간(테스트베드 등) 제공 역할이 중요



—  
세션 2:

# 도시재생과 주거안정

—



## 1. 도시재생 뉴딜의 실효성 제고방안

이왕건 도시재생연구센터장

박소영 도시재생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권규상 도시재생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2.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발전방향

천현숙 주택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 3. 빅데이터 기반의 국토·도시정책 추진방안

임은선 국토정보분석센터장



2017년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 도시재생 뉴딜의 실효성 제고방안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이왕건 도시재생연구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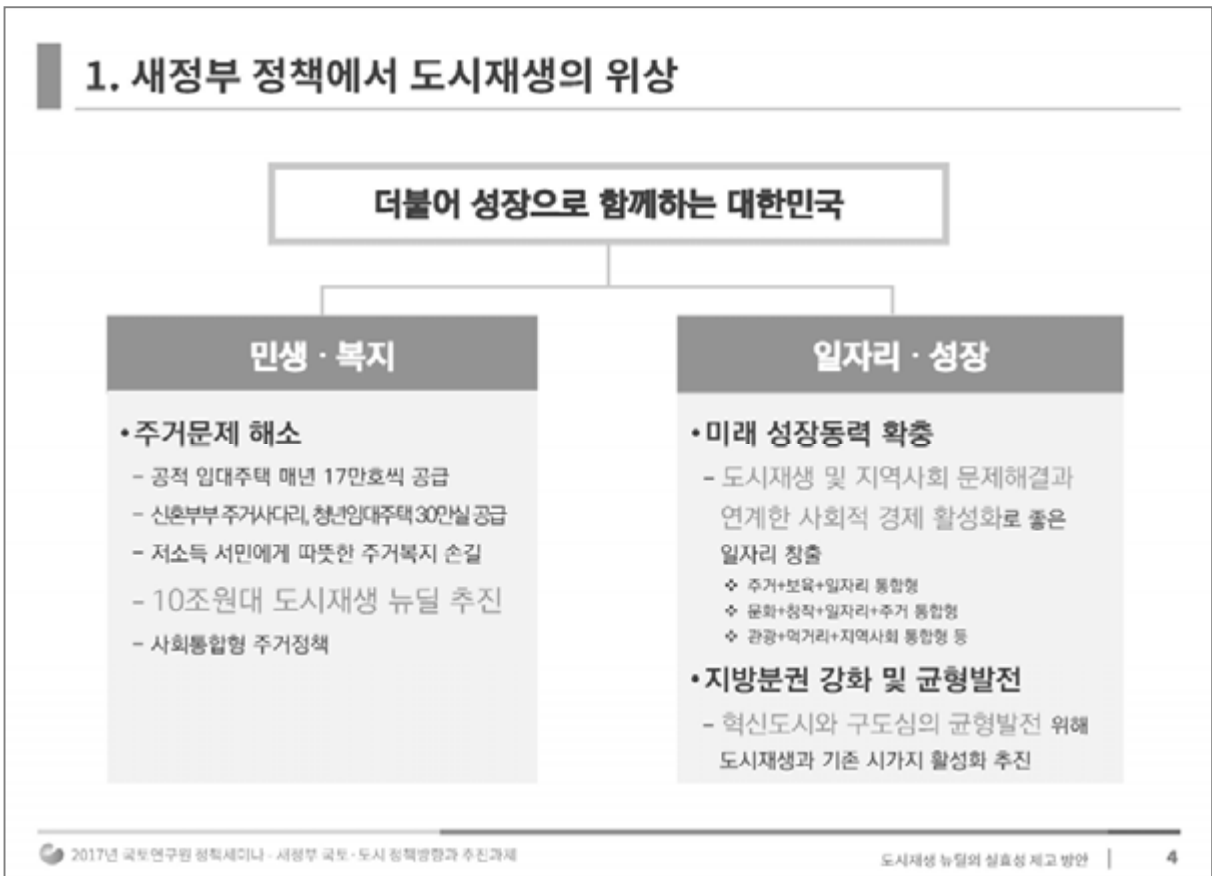
박소영 도시재생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권규상 도시재생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차례

- I.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 II. 도시재생 뉴딜의 과제
- III. 도시재생 뉴딜의 실효성 제고방안

# I.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 2.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 개요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보장(헌법 제35조)

### 노후 저층주거지

- 노후 주거지에 아파트 단지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 지원
- 노후화된 기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공공기관 주도)
- 녹색건축을 주거유형개선에 우선 적용

### 원도심, 전통산업 집적지, 재래시장 등

- 원도심, 전통산업 집적지, 재래시장 등을 새로운 산업여건에 맞추어 집약적으로 정비하여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제고
- ※ 저소득층 주거, 영세 상업공간 확보 의무화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수립

### 쇠퇴한 농촌지역

- 쇠퇴한 농촌지역 고령어르신 공동 주거인 생활복지주택 건설과 농촌 노후주택 개량사업 추진

### 실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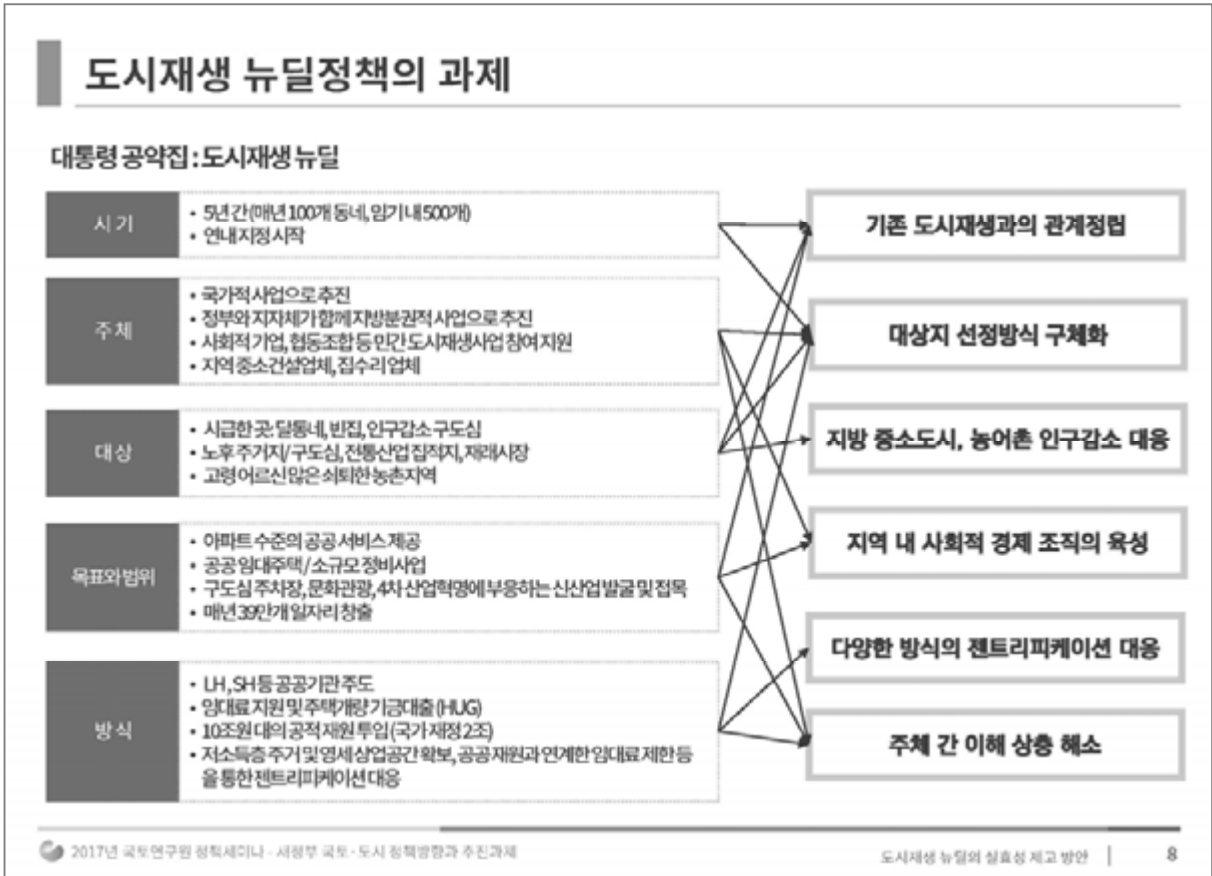
- 매년 공적 자원 10조원을 투입하고, 공공기관 주도로 추진
- 공기업이 사업을 주도하되, 인센티브, 예산 및 기금지원, 도시계획 특례를 확대하여 실현가능성 제고
- 저소득층 주거, 영세상업공간 확보 의무화 및 공공자원 지원 시 임대료 제한 등 젠트리피케이션 대비

## 3. 새 정부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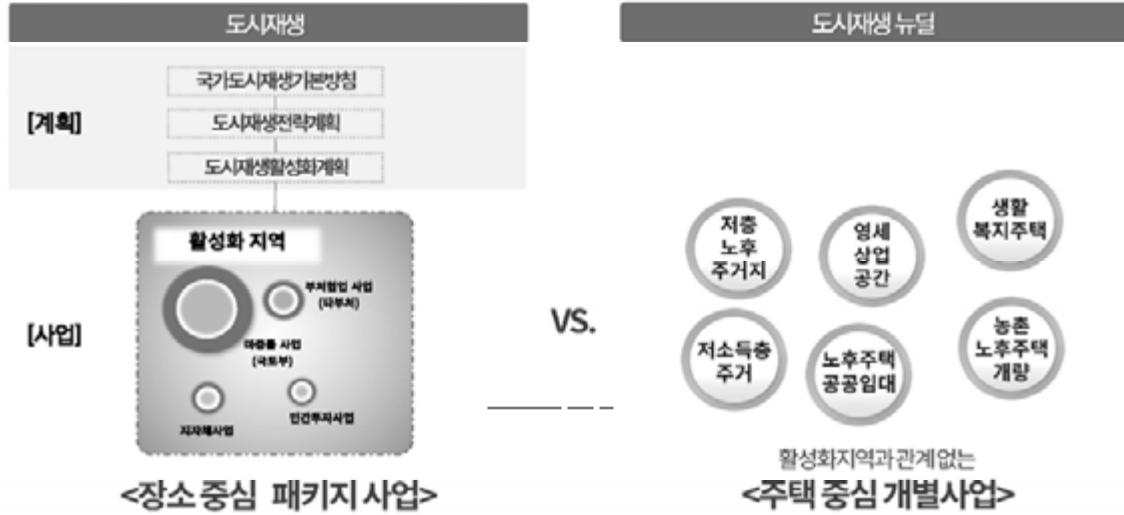
주민 체감도 제고, 추진력 강화

## II. 도시재생 뉴딜의 과제



## (과제 1) 기존 도시재생사업과의 관계 정립 필요

-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이외 지역에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미정



뉴딜 사업과 기존 도시재생사업 간 연계방안 마련 필요

## (과제 2) 도시재생뉴딜 사업대상지 선정방식의 구체화

- 연간 100개소 선정 공약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선정기준 및 방식 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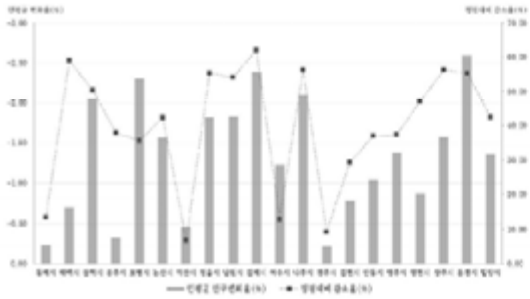
신규 대상 선정기준 및 방식, 중앙-지방의 역할 등 조속한 방안 마련

### (과제 3) 중소도시 및 농어촌 인구감소에 따른 축소도시 대응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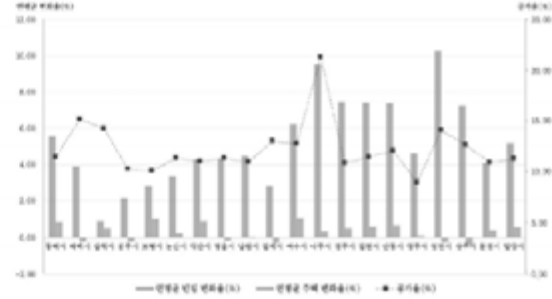
#### 대도시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과 농어촌 인구감소와의 상충

- 전북, 전남, 강원, 경북 등에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빈 집이 증가하는 등 축소도시 현상 발생
- 개발수요가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대도시 중심의 재생 사업 추진방식으로는 한계

축소도시의 인구감소 실태



축소도시의 빈집증가 실태



출처: 구형수 외, 2016, 지방청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p. 66-67

#### 축소도시 특성에 부합하는 생활서비스 연계 재생전략 추진

### (과제 4) 도시재생 시행주체로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미성숙

- 사회적 경제조직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아직 낮은 수준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단위별 평균 일자리 창출 규모 : 3개소 \* 12명 = 36명
  - ※ 단위별 사회적 경제조직 현황: 3개 조직, 마을기업당 평균고용인원: 약 12명(2016년 기준, 행정자치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마을기업당 평균고용인원(인)	6	8	9	8	9	12
마을기업당 평균매출액(억원)	0.358	0.628	0.659	0.803	0.882	0.919

출처: 2016년 행정자치부 대표통계- 마을기업 고용인원 및 수입

- 일반기업도 창업후 생존률이 낮은 상태임. 특히 사회적 경제조직은 정부의 재정지원 종료 후 생존률이 급격히 낮아짐
- 마을기업은 경영노하우 부족, 사업아이템 발굴 및 자본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속성을 갖추기에는 아직 고용 규모나 매출액에서 한계가 있음

#### 도시재생 시행주체의 육성 및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시급

## (과제 5)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 필요

- 패널티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자발적 상생협약만으로는 단기집중적 공공재원 투입에 따른 급격한 토지가격 상승 및 동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는 어려움



### 보완 필요성

- 국비지원 이외 재생사업에서 효과 미약
- 다른 관련 법률 개정과의 연계 부족
- 상업이외의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대안 부족

## 상생 협약과 같은 자발적 수준을 넘어 구체화된 실천방안 마련 필요

## (과제 6) 범부처 이해관계 조정 및 협업사업 추진 방안 마련 필요

- 형식적 수준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운영으로는 세부 정책 조정 또는 부처간 이해관계 중재 어려움
- \* 3년 넘는 기간 7번 회의가 있었지만 대면회의는 2번에 불과했고, 나머지 5번 회의는 일부 또는 대부분 장관들이 불참해 서면으로 대체



### 부처간 협력 및 이해관계 조정 역할 필요

<특별위원회 구성>  
 - 16개 중앙행정기관장  
 - 13명 민간위원

##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 및 협업사업 발굴을 위한 범부처 통합기구 필요

### III. 도시재생 뉴딜의 실효성 제고 방안

#### 도시재생 뉴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본 방향

- 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조건에 따라 뉴딜사업 선택적 활용
- 2 국가-지자체-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대상지 선정
- 3 지방 인구감소에 대응한 축소도시 대응 전략 도입
- 4 부처 협업사업을 통한 콘텐츠 질 개선 및 재정 효율성 제고
- 5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주체별 해결방안 마련
- 6 중간지원조직과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7 부처 간 조율 및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도시재생 합동 추진단' 설치

## (방안 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조건에 따라 뉴딜사업 선택적 활용

활성화지역  
(생활권)



도시경제기반형



근린(중심시가지형)



근린(일반형)

기존 도시재생 유형의 틀 내에서  
도시재생 뉴딜의 개별 사업 기법 수용하여 사업추진

뉴딜사업 예시  
(개별단위사업)

저층  
노후  
주거지

저소득층  
주거

노후주택  
공공임대

영세  
상업  
공간

농촌  
노후주택  
개량

생활  
복지주택

활성화지역과 단위사업간 선택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허용

## (방안 2) 국가-지자체-민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대상지 선정

• 시급한 곳은 국가가 우선 지원하고, 기타 쇠퇴지역은 지자체가 공모사업 통해 자율추진

← 쇠퇴 및 취약지역 →	← 쇠퇴 지역 →	← 일반 노후지역 →
[ 국가 중심 ]	[ 지자체 중심 ]	[ 민간 중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급성이 높은 곳 중, 준비된 곳을 우선 지원</li> <li>- (시급성) (생활)인구(산업)노후+(주거)기초생활수급자</li> <li>- (준비성) 사업에 대한 의지, 주민 역량, 사업대상 부지 확보 가능성 등</li> <li>• 전략/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요건 충족 시 우선지원</li> <li>• 대상지 예시 : 3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현지개발형), 뉴타운 해제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우선지역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로 공모 사업을 추진</li> <li>• 국가는 원칙과 집행기준을 제공, 예산 분배, 제도 개선 등 지원 역할 수행</li> <li>- (계획) 전략/활성화계획 수립 등 준비된 지역 대상</li> <li>- (지원전제) 상생협약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공공예산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나, 노후한 주택이 밀집한 경우</li> <li>• 규제 합리화, 기금 융자, 원스톱 행정 등을 통한 주택개량 또는 소규모 정비 지원</li> </ul>
마중물 + 기금 (단기적)	마중물 + 기금 + 부처협업사업 (중장기적)	기금

• 지자체 차원의 지속가능한 자원확보 통한 지역주도적 정책기반 확보

- 도시재생 특별회계(지자체)에 대한 기금지원 통한 자원확보 지원 및 선순환 구조 마련
- 공공기능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 등

### (방안 3) 인구감소에 대응한 축소도시 전략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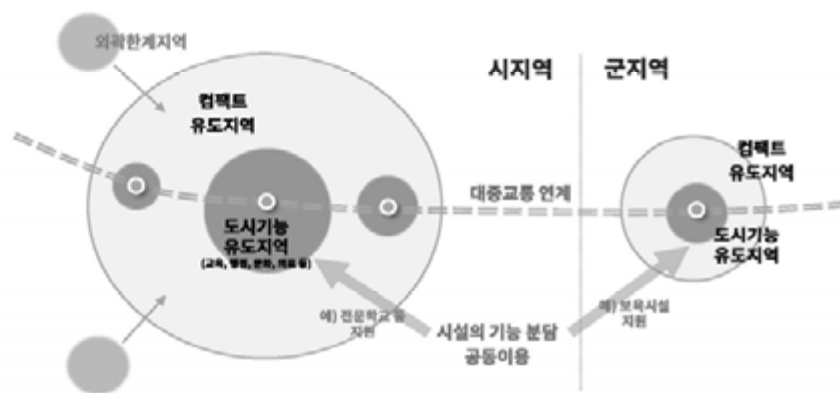
- 저성장, 인구감소시대 대응을 위해 공간구조개편 필요성 확산
- 외곽 확산된 도시기능(교육, 행정, 문화, 의료 등)과 인구를 중심지역으로 재배치하고, 맞춤형 대중교통을 통해 접근성을 제고하여 필요한 도시서비스를 보완하면서 도시관리 비용 저감

축소도시의 공간적 분포



출처: 구형수 외, 2016,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p. 64.

축소도시 전략에 따른 콤팩트-네트워크 시티 개념도



### (방안 4) 부처 협업사업을 통한 콘텐츠 질 개선 및 재정 효율성 제고

- 공간조성사업인 국토부 사업 특성 상 타 부처 프로그램 사업과의 연계 가능
- 내년 도시재생사업 예산 4천억원 이외 1조 6천억원의 재정은 부처 협업을 통해 조달
- 장소 중심적 선택과 집중 통한 재정 효율성 도모



부처별 전문성을 살린 협업사업 **공동 기획 및 공동 공모**  
사업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부처간 성과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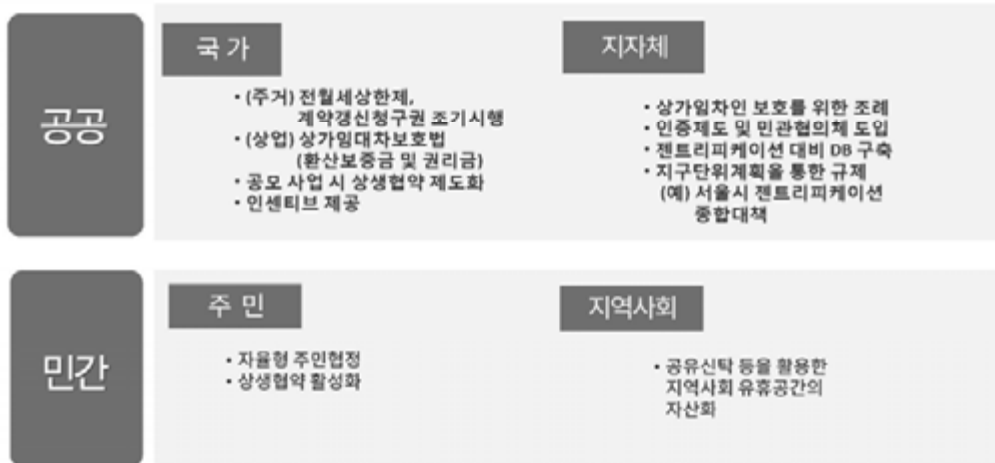
[협업 사업 예시]

-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신산업 발굴형</b>: (산업부, 중기청, 미래부 등) 신학융합지구 조성사업</li> <li>2. <b>문화관광 활성화형</b>: (문화부, 문화재청 등) 관광두레 조성사업</li> <li>3. <b>공공서비스 확대형</b>: (보건복지부, 여가부, 교육부 등) 복지공공서비스 활성화사업</li> </ol> | + | <p>(국토부)</p> <p>유휴부지 리모델링 사업<br/>빈집, 빈점포 개선사업 등</p> |
|--|---|---|

### (방안 5)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주체별 역할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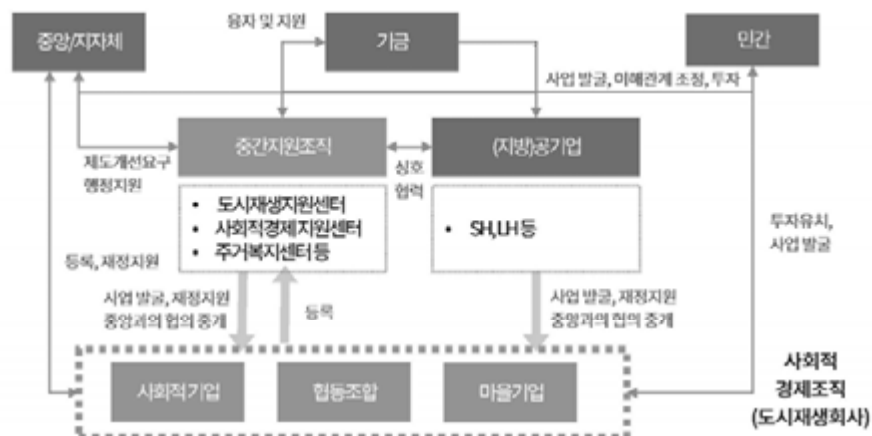
공공은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 민간은 상생협약 내실화 및 지역자산 공유화 준비

- 주민, 상인조직을 통해 자율적 상생협약을 체결도록 요구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
-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되, 문제의 특성과 심각성에 따라 지자체나 국가에서 개입여부와 강도를 결정하는 단계적 해결방식 도입



### (방안 6)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등록제 도입으로 재정지원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
  - \* 영국: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공사에 사업자협회를 등록하도록 하였고 협회를 통해 교부금 지급
-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 관-민 협의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





2017년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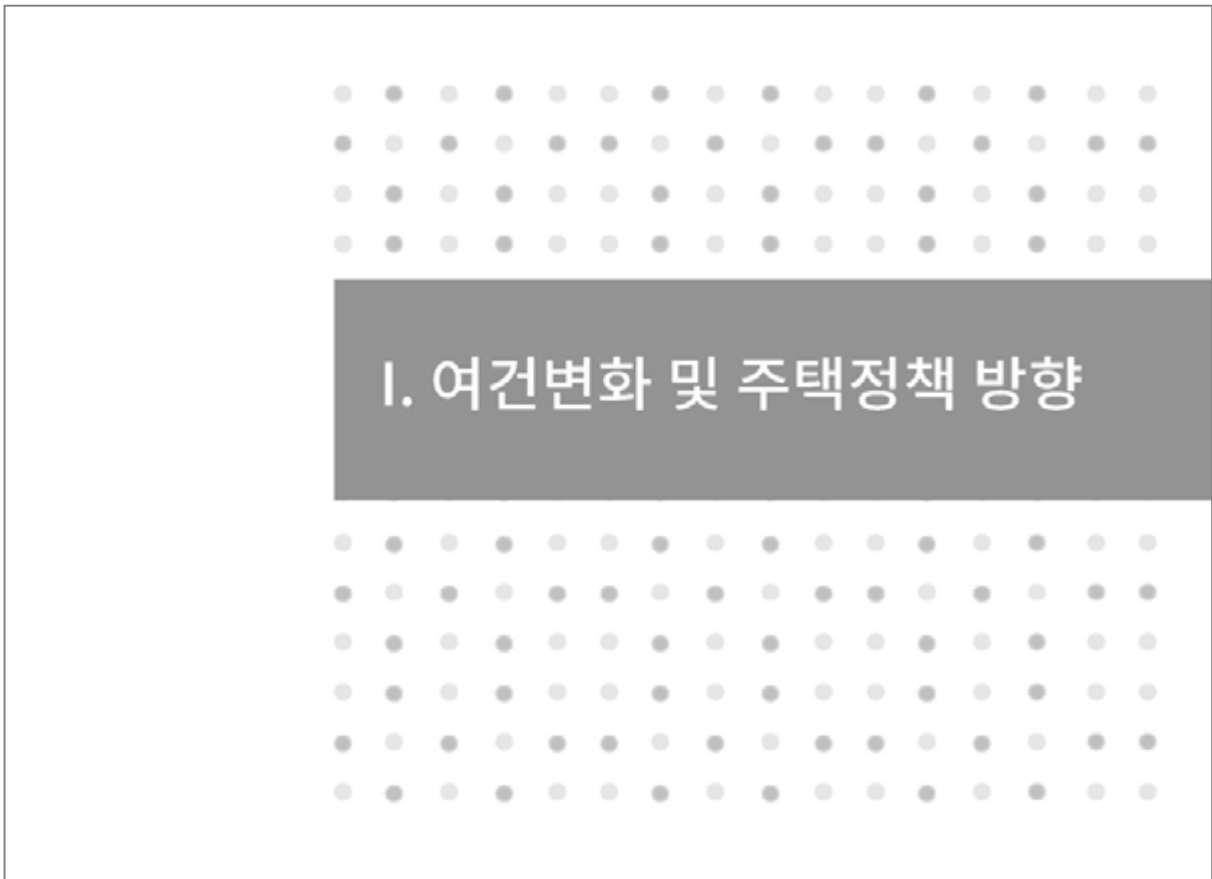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천현숙 주택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



## 차례

- I. 여건변화 및 주택정책 방향
- II. 공적임대주택의 개념 및 성과
- III.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기본방향
- IV.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실행방안
- V. 공적임대주택 관련 향후 검토 과제



## I. 여건변화 및 주택정책 방향

### 1) 여건 변화

#### ○ 전세가 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 증가

- 전세가격(수도권 기준) : 5년간(2012~2016) 연평균 5.2% 상승
-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 ○ 임차 유형 중 월세 비중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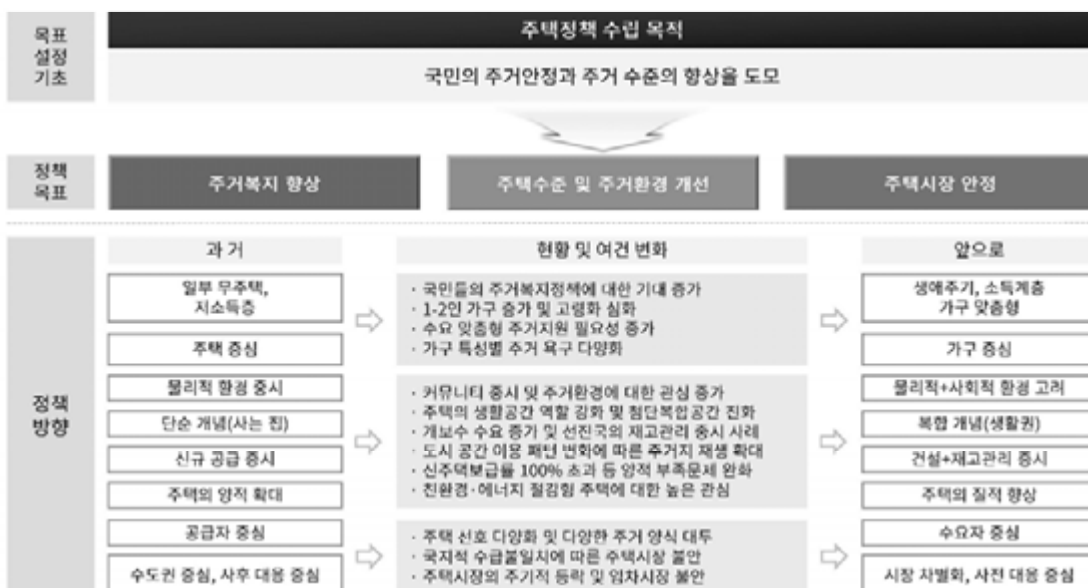
- 월세 비중은 '06년 45.8% → '16년 60.5% 까지 증가
- 월세 비중 : 저소득층 월세 전환 속도가 더 빠름 (저소득층 : 59.4→74.2%, 고소득층 : 24.8→34.5%)
- 월세화로 인한 거주가구의 자산 형성 어려움 및 소비 성향 감소

# 1. 여건변화 및 주택정책 방향

- 주거비 부담(RIR ;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
  - 전국 평균 RIR은 약 20% 내외를 유지
  - RIR : '08년 17.5%, '10년 19.2%, '12년 19.8%, '14년 20.3%, '16년 18.1%
- 1인 가구의 증가
  - 최근 4인 가구의 비중 감소, 1인 가구 비중 증가('06년 14.4%→'16년 27.2%)
  - 연령대별 1인 가구 : 청년층 47%, 중장년층 18%, 노년층 42%
- 초저출산의 장기화 및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
  - 2001년 이후 합계출산율 1.3미만의 초저출산 현상 지속 ('16년 합계출산율 1.17)
  - 노인인구는 '15년 662만 → '30년 1,269만 → '50년 1,800만 명으로 예상되며, 노인인구 비율은 '15년 13.1% → '50년 37.4% 증가 예상

# 1. 여건변화 및 주택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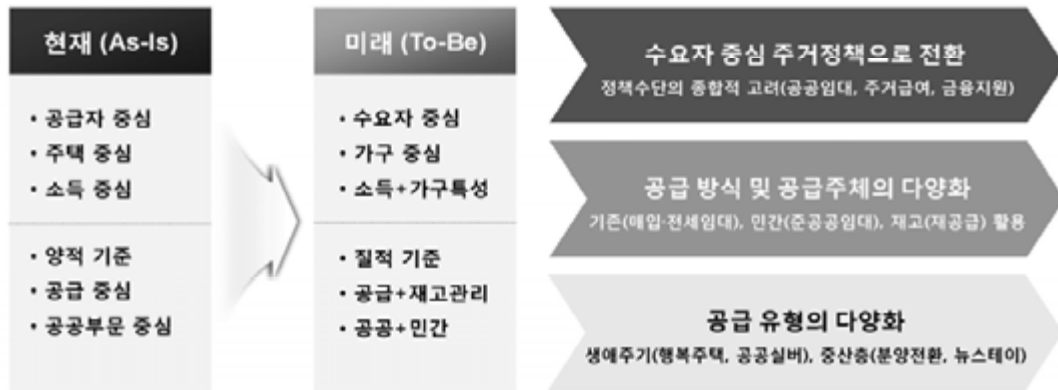
## 2) 주택정책 목표와 방향



# 1. 여건변화 및 주택정책 방향

## 3)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기본 방향

- 서민 주거 안정 : 수요자 중심 주거 정책
- 공적임대주택 확대 공급 : 공급 방식 · 공급 주체 · 공급 유형의 다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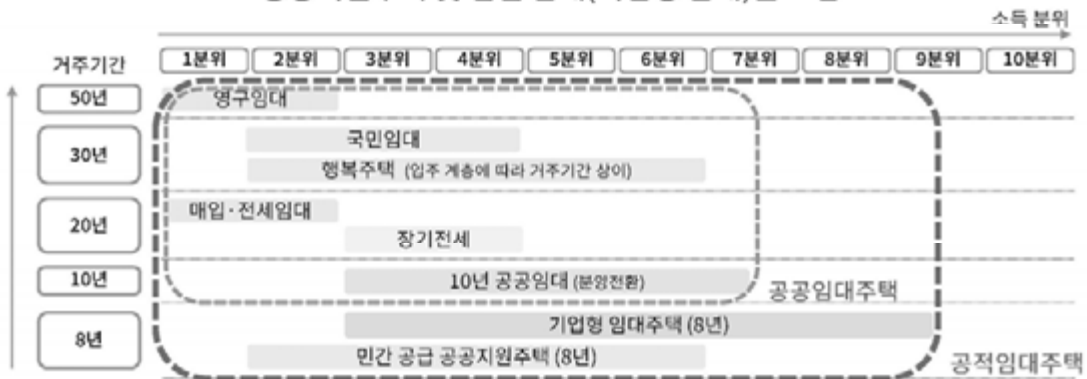


## II. 공적임대주택 개념 및 성과

## 2. 공적임대주택 개념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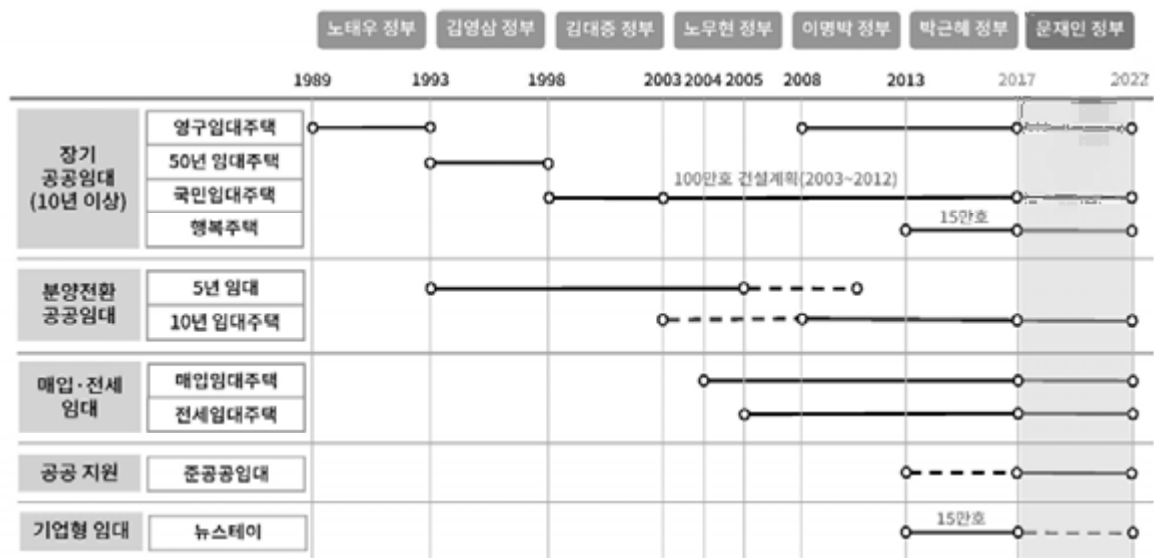
### 1) 공적임대주택의 개념

- 공공임대주택 : (협의) 공공의 재정지원으로 공공부문이 건설, 소유, 관리하는 주택  
(광의) 공공자금 지원으로 건설된 민간임대주택을 포괄하는 개념
- 공적임대주택 : 8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과 8년 이상 임대되는 민간 공급의 공공지원주택 및 건설 임대(기업형 임대)를 포함



## 2. 공적임대주택 개념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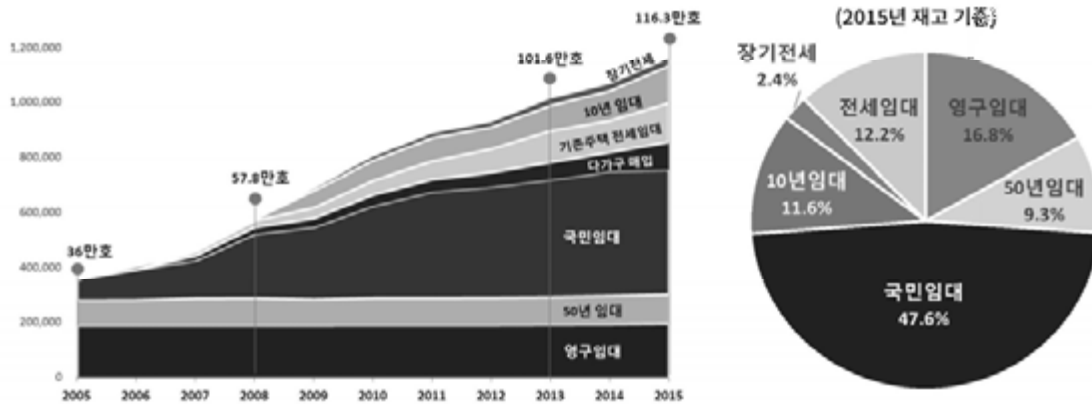
### 2) 공적임대주택의 도입 및 발전과정



## 2. 공적임대주택 개념 및 성과

### 3) 공적임대주택의 연도별·유형별 재고 추이 및 비중

- (2015년 재고비중) 국민(47.6%) > 영구(16.8%) > 전세임대(12.2%) > 10년 임대 (11.6%)
- ※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2015년 기준 1.4만호 공급



## 2. 공적임대주택 개념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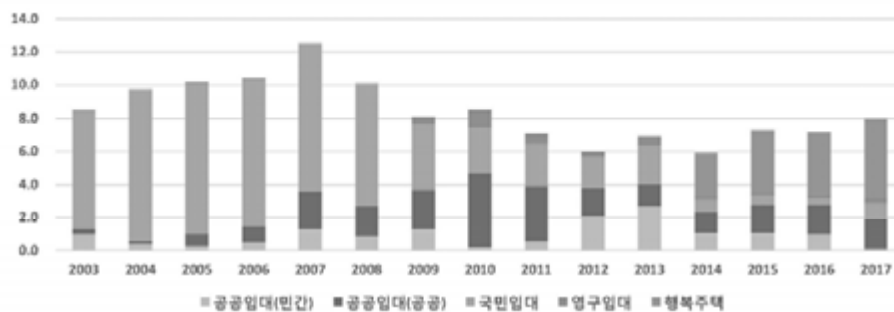
### 4) 공적임대주택 유형별 공급 추이 (사업승인 기준)

- 공급 유형이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다양화
- 2014년 이후 행복주택의 비중이 크게 증가, 국민임대는 감소추세

※ 뉴스테이: '15년 1.4만호, '16년 2.5만호, '17년 4.1만호 (사업인가)

※ 사업주체 다양화: 중앙(LH) 74.4%, 지자체 19.3%, 민간부문 6.3%의 비중 (장기공공)

(단위: 만 호)



\*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2017년 계획은 시행자별 계획을 가집계한 물량임

## 2. 공적임대주택 개념 및 성과

### 5) 공적임대주택 재정·용자 투입 추이

- 공적임대주택에 대한 재정 및 용자 투입액은 연간 6조~8조 수준

(단위: 억원)

유형별/연도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영구임대	3,119	5,297	5,213	4,397	2,109	1,959	715
국민임대	36,953	32,615	13,562	20,670	23,401	8,976	10,259
공공임대(용자)	24,097	14,185	30,430	28,810	15,146	18,543	19,899
행복주택	-	-	-	-	4,294	10,454	13,211
다가구매입임대	2,331	2,537	2,719	4,149	4,095	9,815	9,263
기존주택 전세임대	7,769	7,779	9,342	23,092	17,766	16,320	20,137
임대주택리스 (공공부문)	-	-	-	-	3,242	7,170	10,155
노후공공임대주택 개선(일반회계)	500	670	740	850	500	331	310
총액(재정,용자)	74,269	62,413	61,266	81,118	70,053	73,237	83,6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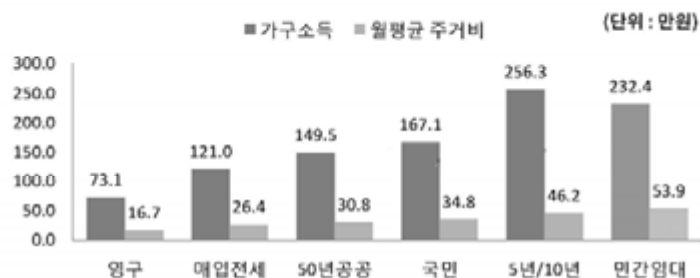
## 2. 공적임대주택 개념 및 성과

### 6) 공적임대주택의 서민주거안정 기능

#### ○ 임차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 월평균주거비(월세+주거관리비)는 민간임대 거주가구(53.9만원)에 비해 공적임대 거주가구(16.7~46.2만원)가 상대적으로 저렴
- 특히 영구임대 및 매입·전세임대(저소득층 대상 유형)가 더욱 저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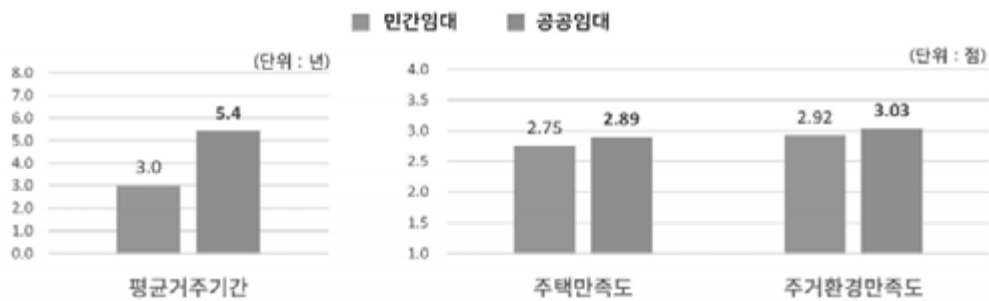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가구소득 및 월평균주거비 비교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주거실태조사', 2011년 임대주택 거주 가구 조사

## 2. 공적임대주택의 개념 및 성과

-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 : 거주기간 증가
  - 민간임대가구의 평균거주기간은 3.0년, 공적임대거주가구는 5.4년
- 임차가구의 삶의 질 개선
  - 공적임대주택 거주가구는 일반 임차가구에 비해 주택만족도(2.89>2.75), 주거환경만족도(3.03>2.92) 모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 공적임대주택의 개념 및 성과

- 전월세 주택의 수급 상황 개선
  - 국민임대주택의 신규 건설·공급은 해당 지역의 임대수급상황을 개선
  - 매입·전세임대주택 공급은 주택 재고가 증가하지 않으므로 수급상황 개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주변지역 전세가격 안정
  - 국민임대주택 공급은 주변 전세가격 안정 효과, 이러한 효과는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일정 수준 확보되어 있는 지역에서 더욱 커짐
  -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의 재고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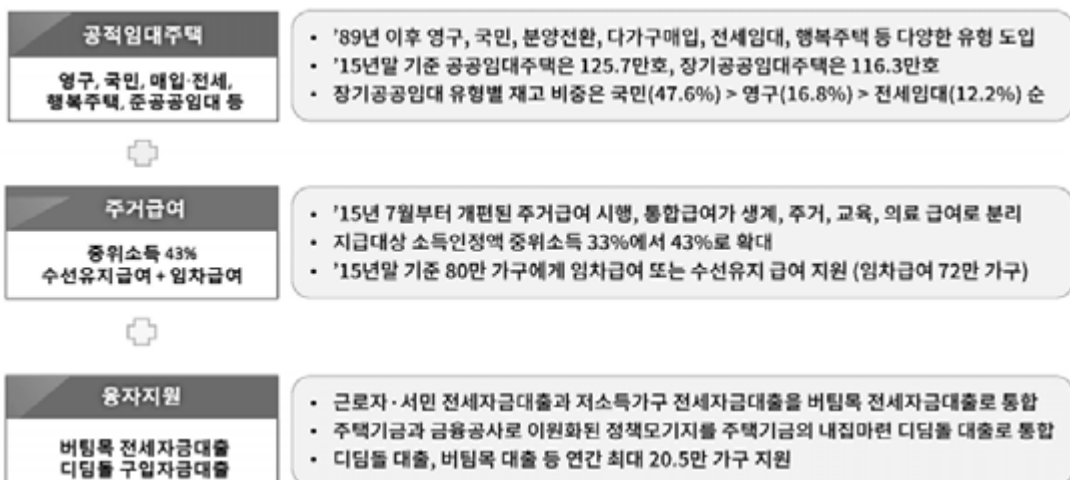
\* 자료 : 박상우·박함용(2014),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지역전세시장에 대한 영향 분석", 국토연구 제83권.

### III.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기본방향

## 3.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기본 방향

### 1) 수요자 중심 주거정책

- 주거지원 방식은 공적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보조(주거급여), 융자지원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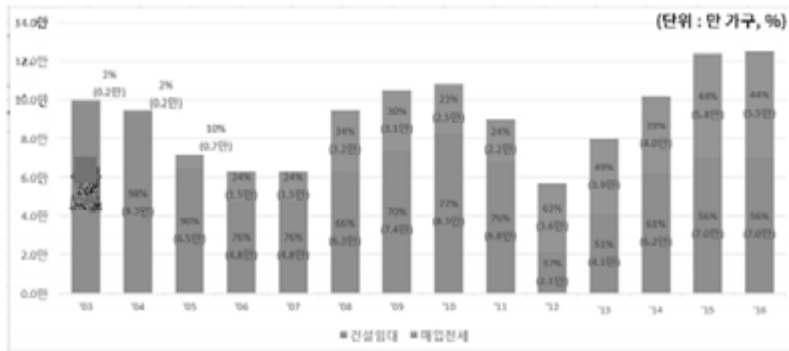


### 3.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기본 방향

#### ○ 공급방식 및 공급주체의 다양화

- 신규건설 방식의 비중을 줄이고, 기존 주택 매입·전세 임대 비중 확대
- 민간 공급 공적임대주택 확대 노력  
→ 집주인 리모델링, 집주인 매입임대의 인센티브 강화

연도별 건설 임대 및 매입·전세 공급 비율 (준공기준)



### 3.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기본 방향

#### ○ 공급 유형의 다양화

- 생애주기와 가구원수 등 가구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저소득 계층 외에 중산층에 양질의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뉴스테이 공급

<가구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17년 주거종합계획)>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뉴스테이"**

뉴스테이의 장점 4가지 ✓

- 최장기간 안정적임 거주 가능
-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로 제한
- 민간 분양 주택 수준의 품질 있는 주택
-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서비스: 임대료, 관리비, 수리비, 에너지, 생활비

### 3.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기본 방향

#### 2)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 저출산·고령화 및 빈생·복지 해결방안으로서의 주거지원 정책
  - 전월세 값 상승으로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의 일상화
  - 주거문제는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 과도한 주거비는 노후 불안 야기  
→ 저출산 문제 해결, 노후 불안 해소, 빈곤 탈출 등 다양한 정책목표와 연계
- 수혜 계층에 부합하는 맞춤형 대책
  - 수혜계층(청년, 신혼, 고령, 저소득 가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 정책
  - 정책수단의 종합적 고려 : 공적임대주택, 융자지원, 주거급여

### 3.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기본 방향

< 새정부 주거 부문 공약 내용 및 수혜 계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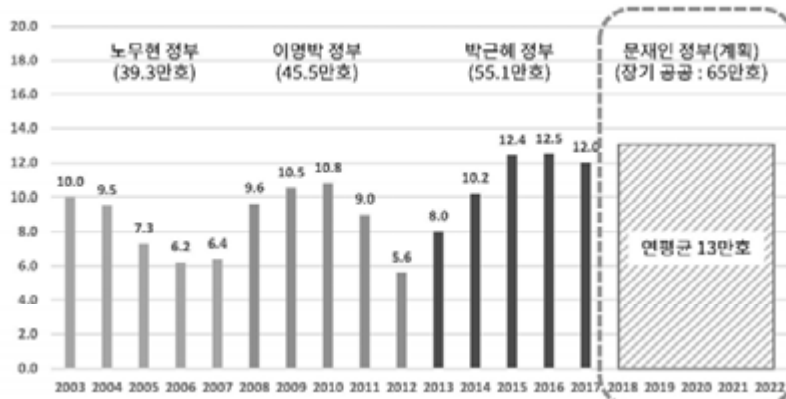


# IV.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실행방안

## 4.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실행방안

### 1) 공적임대주택 공급 목표

- 장기공공임대주택 : 연 13만호, 총 65만호
  - 새정부 장기공공임대주택 계획 물량은 총 65만호 이전 정부 대비 10만호 증가



\*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를 포함한 실적이며, 2017년도는 준공예정물량)

## 4.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실행방안

### ○ 건설 임대주택 공급 여건

-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건설 임대는 사업승인 및 착공 후 준공까지 장기간 소요
- 기존 공급 및 현재 착공·사업승인 계획을 고려하면 약 6~8만호 수준



## 4.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실행방안

### ○ 매입·임차형 임대주택 공급 여건

- 최근 매입임대 약 1~1.5만호, 전세임대 약 3~4만호 수준 공급
- 향후 도시재생사업 확대를 고려하면 매입임대 약 1~2만호 추가 공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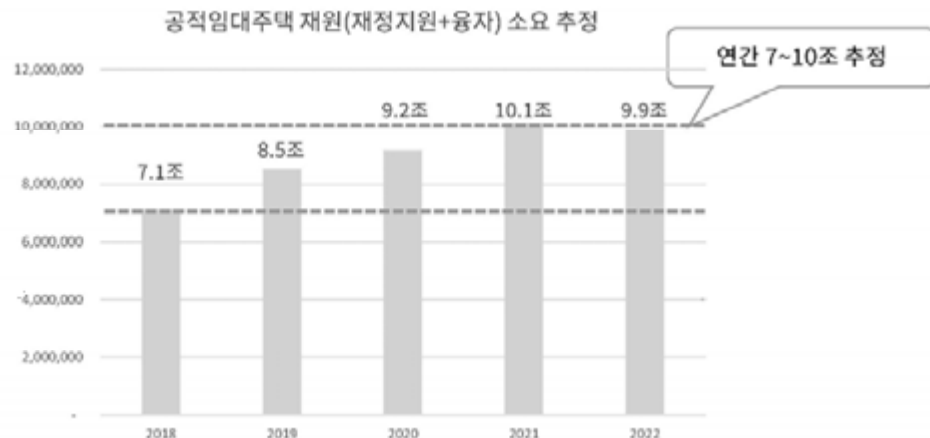
## 4.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실행방안

- 민간건설임대 및 준공공임대 확대 : 공공지원주택 → 연간 4만호
  - 민간건설임대(기업형 임대)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공공지원주택으로 공급
    - 무주택자 우선 입주
    - 주변 시세 이하 초기 임대료
    - 업조닝(Up Zoning)시 공적 기여 의무 부과
  - 집주인 리모델링 등 유형 확대 및 민간 참여를 통한 준공공임대 확대
- 민간 공급 공공지원주택 활성화 : 사회적 경제주체 참여 확대 모색
  - 공공부문의 공급 역량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공급 공공지원주택 확대 노력
  - 집주인 리모델링,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공급 활성화 모색
  -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비영리 기관이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용자(주택도시기금) 및 보증(HUG) 지원

## 4.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실행방안

### 2) 자원 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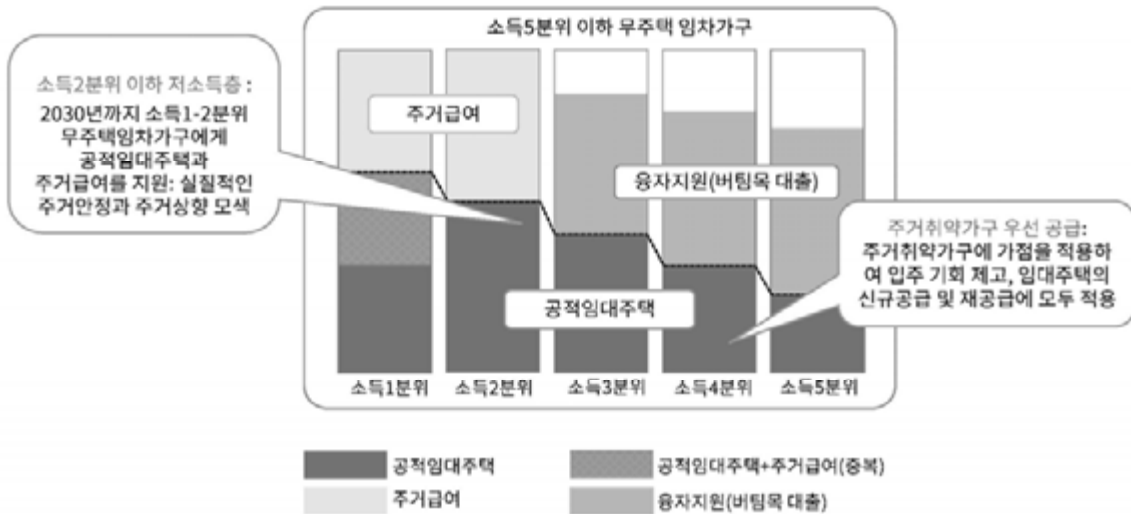
- 신규 건설 및 매입·임차형 임대주택 13만호의 자원소요액은 연간 7~10조로 추정



## 4.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실행방안

### 3) 수혜계층별 주거지원 수준 및 균형 배분

- 소득계층별 주거지원 균형 배분 방향 : 저소득층 사각지대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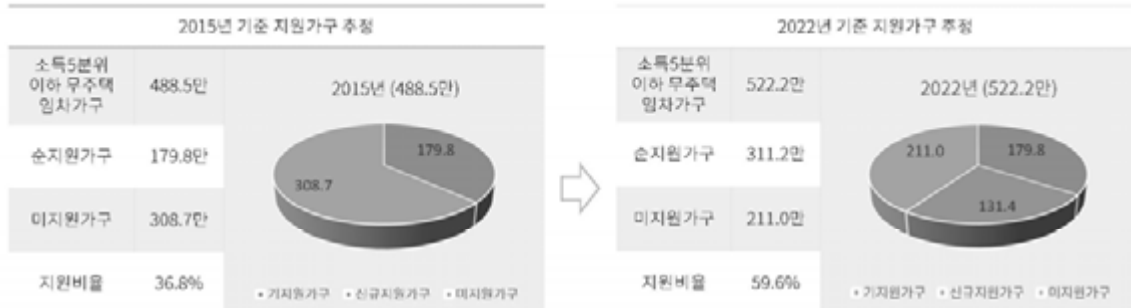


## 4.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실행방안

-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확대 : 36.8% → 59.6%

- 무주택 서민 가구(소득5분위 이하 무주택임차가구)에 대한 주거복지 순지원 비율은 '15년 말 36.8%(179.8만 가구)에서 '22년 59.6%(311.2만 가구) 수준으로 확대 추정
- 공적 임대 200.7만, 주거급여 90.1만, 전세자금대출 87.1만 지원 추정, 순지원가구는 중복 제외 값

2022년 주거복지 지원가구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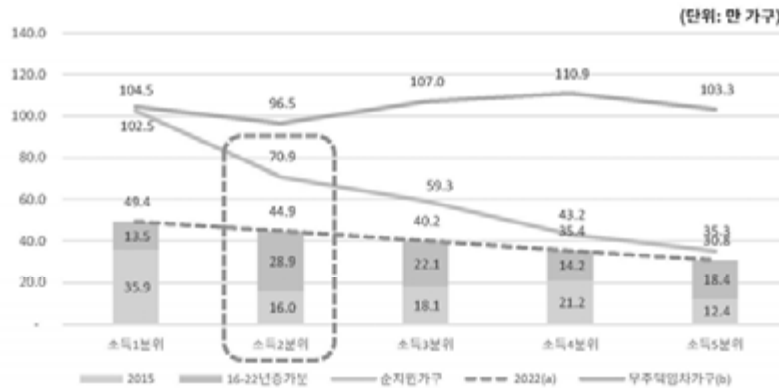
\* 주) 공적임대주택은 공약 내용 반영,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50% 확대, 비임대대출은 현재 수준 유지를 가정하여 추정한 값임

## 4.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실행방안

### ○ 소득분위별 균형 배분

- 주거취약가구 우선 공급 및 재공급을 통해 주거취약가구 비중이 높으나 주거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득2분위 지원 확대 제고

소득분위별 주거지원 균형 배분 (2015년→2022년)



## 4.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실행방안

### ○ 청년·신혼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소득5분위이하 무주택가구 중 특성가구의 주거지원 비율: 고령가구 65.8% > 기타가구 46.0% . 청년·신혼 8.3% 순임
- 신혼 및 청년가구에 대한 공적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통해 지원 비율 상향 예상 - 청년·신혼(소득5분위 이하 무주택가구)에 대한 지원 비율 확대 (8.3% → 36.1%)

특성가구별 소득5분위 이하 무주택가구 중 지원규모 추정 (2022년)

(단위: 만 가구, %)

구분	2015년			2022년		
	소득5분위이하 무주택임차가구	순지원가구	지원비율	소득5분위이하 무주택임차가구	순지원가구	지원비율
청년·신혼	163.4	13.6	8.3%	174.8	63.1	36.1%
고령가구	83.9	55.2	65.8%	89.7	75.5	84.2%
일반가구	241.1	111.0	46.0%	257.7	172.5	66.9%
합계	488.5	179.8	36.8%	522.2	311.2	59.6%

\*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임대주택통계, 주거급여 수급자료, 전세대출 자료, 2015 인구주택총조사

## 4. 공적임대주택 정책의 실행방안

### ※ 청년 및 신혼부부가구 지원 확대 근거

- 청년 계층의 열악한 주거 실태 :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높지만 무주택기간이나 가족 수, 장애 정도 등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 적음
- 미래 세대에의 투자 : 청년 계층이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 직면하여 자신과 미래에 대한 투자에 소홀해 질 경우 계층별 격차는 고착되고, 사회적 이동성 약화 우려
- 세대간 자산 이전 완화 : 청년 및 신혼 가구에 대한 정부의 주거 지원은 부모 자녀간 과도한 세대간 자산 이전으로 인한 노후 비용 소진 현상을 완화시켜주는 기능
- 복지정책과 저출산 정책의 구분 : 신혼부부의 지원이 다른 저소득가구의 지원을 줄이지 않도록 신혼부부 4만 가구 지원은 별도 추가 지원 필요

## V. 공적임대주택 관련 향후 검토 과제

## 5. 공적임대주택 관련 향후 검토 과제

### 1) 공적임대주택 유형 통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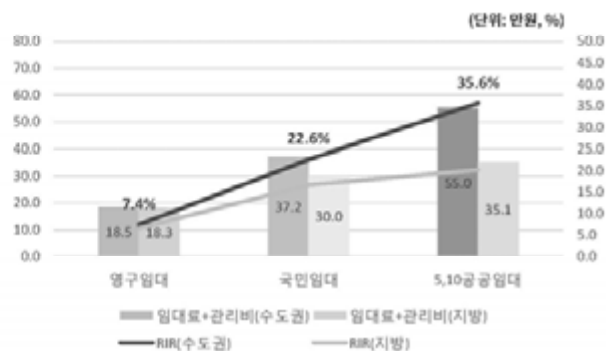
- 공적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필요성 : 지역내 유형별 수요-공급의 매칭 강화
  - 영구, 50년, 매입·전세, 국민임대(40㎡이하)를 소득 1-2분위 대상 임대주택으로, 국민임대(40㎡초과), 분양전환(5년/10년)을 소득3-5분위 대상 임대주택으로 구분
  - 소득계층 대상별 임대주택 재고비중의 지역적 차이 : 서울을 비롯한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소득1-2분위 대상 임대주택이 상대적으로 높고, 강원과 전남 등 지역은 3-5분위 대상 임대주택이 무주택가구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수요 변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 유형 통합 필요 : 지역에 따라 수요와 공급 매칭 강화를 위해 지역별 인구 구조와 가구 특성 및 지역의 주거지원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적임대주택의 유형 통합 필요

## 5. 공적임대주택 관련 향후 검토 과제

- 공적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기본 방향
  -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 체계로의 개편
  - 연 4만호 수준인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물량을 활용한 점진적 통합

유형	보증금+임대료
영구임대	시중 시세의 30% 수준
다가구매입	시중 시세의 30% 수준
국민임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행복주택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5년·10년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유형별 주거비 수준 및 주거비 부담(RIR) : 소득2분위



\* 자료 : 2011년 주거실태조사(임대주택 거주가구), RIR은 대출금리(5.69%) 적용

## 5. 공적임대주택 관련 향후 검토 과제

### 2) 택지 마련 및 도시재생과 연계 방안

- 추가 택지 확보 및 실천방안 마련 필요
- 도시 재생 연계의 필요성 : 구도심 쇠퇴와 임대주택 공급 문제 동시 해결
  - 시간·비용·부지 확보의 문제 : 신규주택 공급방식은 공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 있음
  - 구도심의 슬럼화 및 노후불량 건축물 문제 해결 필요 : 최근 재개발구역의 지구지정 취소, 지방도시의 구도심 슬럼화 등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한 상황  
→ 이 지역들은 입지는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
  -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고 증가 : 경과년수가 영구임대 27년, 국민임대 15년이 되어 감에 따라 노후 단지의 시설관리 및 현대화에 대한 관리 계획 필요

## 5. 공적임대주택 관련 향후 검토 과제

- 실행 방안 : 지역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사업방식 활용

사업 유형	세부 유형 및 대상지역	
정비사업 보완형	재개발·재건축 사업 (만년등급 D,E지역, 공공 개발 불가피한 지구)	LH 및 지방공기업이 노후 불량 주거지를 수용하여 공적임대·민간분양주택 혼합건설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도시계획적 중요지역이나 장기미추진 쇠퇴지구)	
저층 주거지 정비 및 매입	저층 노후주거지 재생모델 (뉴타운 및 정비사업 해제지역)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지방공기업 등이 불량주택·나대지 활용 임대주택 건설
	기존 주택 매입, 장기 임차 공공주택 (노후 주택 중 빈집, 장기 임차 후 활용)	
역세권 정비형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정비 (역세권 500m 이내 지역)	LH, 지자체, 지방공기업이 공·폐가 등 불량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재건축
	역세권 공유저 활용 복합 사업 구역 추진 (역세권내 국공유지 중 활용 필요)	
사회통합 농어촌복지형	생활복지주택, 농어촌 복지 공유 주택 등	LH 또는 지방공기업이 노후공공건축물을 복합개발 후 공공건축물은 해당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 임대주택은 운영 관리
	중소도시 시내 정비(지방 중소도시 노후상가지역 중 정비 필요 지구)	
공유재산 활용형	국공유지 위탁개발사업 (청사, 창업지원시설, 기타 복합시설 위탁개발)	
	대규모 국공유지 개발사업 (이전 군부대, 공항, 공공기관 이전지 등)	
	저밀 공유 청사 복합화 사업 (동주민센터, 파출소 등 저밀 활용 공공청사)	
혁신공간 창출형	도심 신활력 거점공간 조성 (대학가, 구산업 거점 등 도심내 저활력지역)	
	도심정단산업단지, 복합지역산업센터 건립(노후 산업지역 등 쇠퇴지역)	
	복합 기숙사 건축 및 캠퍼스 타운 조성 (대학내 무지, 대학 인근 지역)	
	생산하는 도시, 생산하는 아파트단지 지원사업 (아파트내 일자리 기능 구축)	

## 5. 공적임대주택 관련 향후 검토 과제

### ○ 실행 방안 : 공간 단위 계획 및 유인구조 마련 필요

- 도시재생을 통해 연 5만호 공급(매입형 3만·임차형 2만)계획 : 현재 도시재생과 공공 임대 공급계획 간 정합성 부족, 매입·임차형(장기공공) 총 6만호 중 5만호의 도시재생을 통한 공급은 면밀한 대책 필요
- 공간 단위 계획 : 도시재생은 지역여건을 반영한 지역단위의 종합 계획 필요
- 지자체 주도적 참여를 위한 유인구조 : 도시재생 지역 공모 평가시 공적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중요 지표로 고려하는 방안 검토



## 5. 공적임대주택 관련 향후 검토 과제

### 3) 지자체 중심의 공급 확대 방안

#### ○ 자원조달 및 구조적 원인 해소

- 사업시행자의 자원 조달 부담 :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자원 부담 비중이 10%이나 실질적으로는 27.8%로 나타나 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
- 세수감소 및 복지·관리비용 증가 우려 : 임대주택 공급 후에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지방세 세수가 감소, 저소득층의 유입으로 인한 복지 비용의 증가, 관리 및 유지보수비용 등이 지자체의 부담이 됨
- 지방공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 지방공기업에 대한 부채비율을 200%수준까지 낮추는 부채감축계획도 지자체의 공공임대주택공급을 어렵게 하는 요인
- 지역주민의 반대여론 : 임대주택에 대한 낙인 효과 등으로 지역사회의 반대

## 5. 공적임대주택 관련 향후 검토 과제

- 지자체 중심 공급 확대를 위한 기본 방향
  - 재무적 부담 가중 요인 해결방안 마련 : 사업 유형별 표준건축비와 정부재정부담 수준 조정 필요, 임대료도 지자체에서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 필요
  - 지역별 주거지원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공급 및 지원이 부족한 지자체에 부담금 부과, 상회하는 지자체에는 기금 및 특별 지원금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지자체 브랜드 임대주택 프로그램 지원 : 기존 제도를 활용하여 지자체가 자체 임대주택 공급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지원 (서울 '역세권2030 청년주택', 경기 '따복하우스')
  - 공모사업을 통한 지자체 참여 확대 :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사업과 낙후지역 정비사업을 동시에 추진 할 수 있는 장점
  - 지방공기업 평가방식 조정 : 신규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 및 평가구조 개발

## 5. 공적임대주택 관련 향후 검토 과제

### 4)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필요성
  - 주거복지 업무가 확대되었으나, 담당기관 내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은 부족
    - 주민센터에는 주거복지 전문인력이 거의 없고, 시군구도 주거복지팀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주택부서는 복지마인드, 복지부서는 주택 관련 전문성 부족 문제
    - \*주거급여 담당부서는 지자체별로 주택부서(51%), 복지부서(40%) 등
  - 다양한 유형의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고 있으나, 역할·체계 미정립
    - 지자체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이 제각기 다르고(상담·사례발굴, 특정 주거복지사업 수행 등) 지역별 편차가 크며, 마이홈센터('17년 42곳) 역할과도 중첩
    - \*서울에는 LH 마이홈(4개), 서울시주거복지센터(10개), SH주거복지센터(4개) 등 총 18개의 주거복지센터가 운영되는 반면, 농어촌지역은 관련 조직·지원 미흡

## 5. 공적임대주택 관련 향후 검토 과제

### ○ 일자리 창출 방안 : 주거복지 전담 인력 확충

- 지자체의 주거복지 전문성 제고 및 인력·조직 확충
  - 주민센터: 상담 및 사례발굴을 위해 1명 이상의 주거복지 담당자를 지정·교육(단기)하거나 전문인력(주거복지사, 경력 3년 이상 등) 배치(장기)
  - 시군구: 1개 과 이상의 주거복지 전담조직을 설치, 주거복지사업을 총괄(주거급여 및 공공임대)하고 신규 주거복지사업 발굴·기획
- 일자리 창출 규모 : 약 4,200명
  - 주민센터: '읍면동 복지허브화'와 연계, 1명 이상 주거복지 전담인력 배치
    - \* 모든 읍면동 (3,502개) 1명 이상 배치시 → 약 3,500명 일자리 창출 가능
  - 시군구: 주거복지 전담조직 신설 및 3인 이상 전문 인력 배치
    - \* 모든 시군구(226개) 3명 이상 배치시 → 약 700명 일자리 창출 가능

감사합니다

(hchun@krihs.re.kr)

2017년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 빅데이터 기반 국토·도시정책 추진방안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임은선 국토정보분석센터장



##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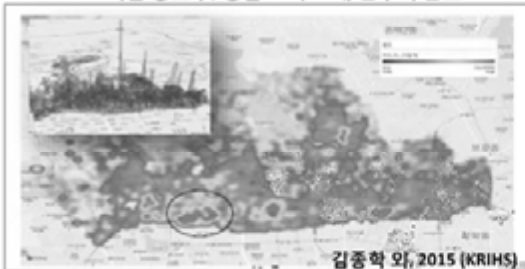
- I. 빅데이터, 국민참여와 소통의 시대
- II. 데이터 기반 정책의 현주소
- III. 빅데이터 기반 국토·도시정책 추진전략
- IV. 주요 추진 과제

# I. 빅데이터, 국민참여와 소통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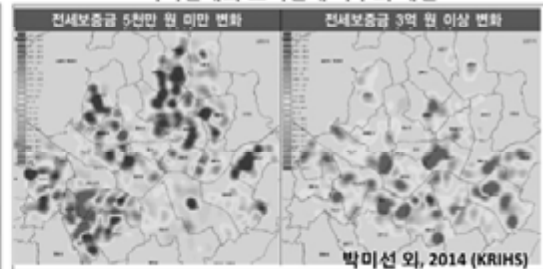
## 1.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

- 사물인터넷(IoT), 소셜미디어(SNS) 발달로 ‘빅데이터 시대’ 도래
  - 초연결 사회를 사는 모바일 인류(Phono Sapiens)\*는 빅데이터의 생산자이자 소비자
- 빅데이터는 세상(時·空·人)을 담은 ‘Real Data’
  - 사람의 활동과 생각, 사물의 움직임과 패턴, 환경의 상태와 변화를 담은 데이터
  - 빅데이터의 5V : Volume(대용량), Velocity(실시간), Variety(다양성), Veracity(정확도), Value(가치)

서울 종로구, 평일 15시 40대 인구의 분포



저액전세와 고액전세 가구의 패턴



\*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 : 스마트폰없이 생활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세대, 썬이콘노미스트 ‘지혜가 있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에 비해 포노 사피엔스(지혜가 있는 전자기기)라고 부른 데서 나온 용어

## 2. 초연결 사회의 국민 프로듀서

### ● 초연결 사회의 국민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정책 프로듀서

- 국민이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여 현상진단, 원인분석, 예측처방하는 스마트 시대



## 3. 국토의 新가치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의 역할

### ● 국토여건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 다양성, 리스크 등 당면이슈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모색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

- 저성장, 기후변화, 고령화, 양극화 상태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아 국토의 지속가능한 스마트 성장, 건강과 복지, 포용과 협력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빅데이터 활용 필요



## II . 데이터기반 정책의 현주소

### 1.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현황

● 빅데이터 시장의 확대

- 전 세계 빅데이터 산업의 시장 규모는 연평균 27%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32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은 2015년 2.6억 달러에서 2020년 8.9억 달러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대한상공회의소, 2014.)

● 정부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도 증가 추이



\*출처: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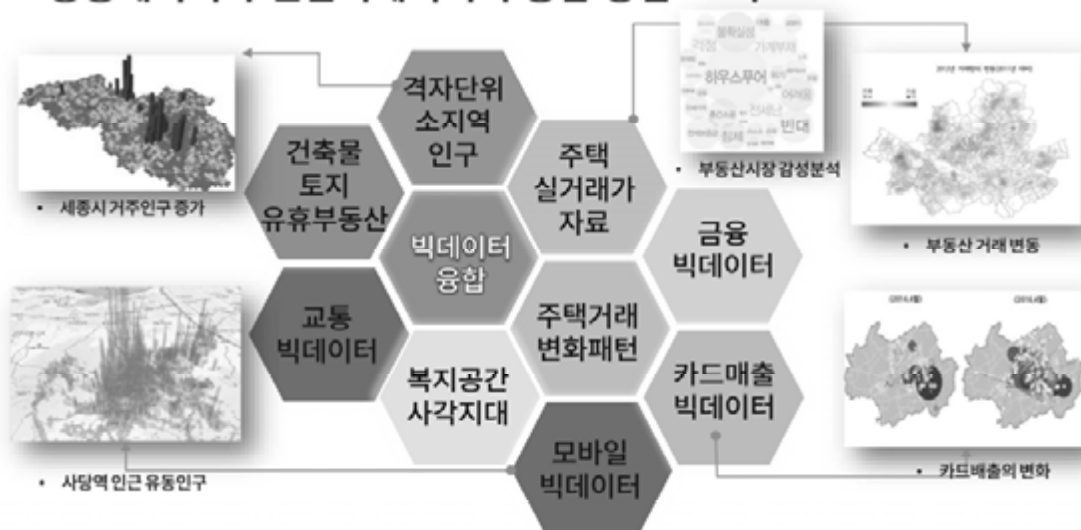
## 2. 국내 데이터기반 정책 동향

### ● 각 부처에서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과제 발굴 및 시행

정부부처	빅데이터 활용 주요 과제
통계청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통계 자동 생산
경찰청	범죄발생 장소·시간 예측을 통한 범죄발생 최소화
국민권익위	민원정보를 분석하여 국민통합과 정책지원 강화
식약처	의료빅데이터 연계 통합시스템 구축
환경부	빅데이터 기반 환경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
국토부	공간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경찰청	주민참여형 교통사고 감소체계 구축
방재청	예측기반의 자연재해 조기 감지 대응
미래부	음란물 유통차단을 통한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
복지부	복지 수요-공급 매칭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상청	국가 기후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 3. 국토도시분야 빅데이터 활용 연구 동향

- 인구, 주택, 도시, 교통, 경제 등 분야별 빅데이터 융합활용 모델 발굴
- 공공데이터와 민간빅데이터의 융합 방법 모색



임은선, 김대중, 이영주, 김동환, 김종학, 박천규, 황영화 외 2014-2017(국토연구원) 수행과제

## 4. 데이터 기반 정책의 현주소 : 활용측면

### 정책시행 측면

#### 정책 실증지표의 활용 부족, 데이터 기반으로 정책간 조율과 융합 어려움

-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행정통계 데이터의 시간정확성, 공간상세성, 시계열 일관성 부족으로 정책 타겟팅이 어렵고 실효성이 미흡
- 적절한 장래수요 예측을 위한 신뢰도 높은 데이터확보가 어려움
- 수평적(부처간), 수직적(중앙과 지방)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지표(데이터)의 일관성/차별성이 부족하여 유사정책의 중복과 과잉투자를 야기

### 적용확산 측면

#### 빅데이터 융합모델 발굴 등 실험연구 후, 실무 적용 및 확산은 단절

- 시범사업으로 여러 정책 활용모델이 도출되지만 연구수준에만 머물고 실무에 적용 및 확산하기 위한 검증, 평가, 제도화 단계로 발전 필요
- 정책 및 계획수립 인적자원이 실무수행에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함양을 위한 교육과 지원 부족

## 4. 데이터 기반 정책의 현주소 : 기술측면

### 빅데이터 활용

#### 빅데이터 구매, 추출, 정제, 가공, 분석 비용의 부담과 해석 부족

- 정형, 비정형의 공공과 민간의 빅데이터로 부터 정책에 필요한 인사이트(패턴, 통찰, 가치 등)를 끌어내는 과정의 전문성 미흡, 비용투자 등 부담
- 빅데이터 인사이트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학습, 이행과정이 필요

### 플랫폼

#### 빅데이터 플랫폼의 순추진국시대, 수요자-공급자 간 충분한 협의 필요

- 부처별로 구축한 플랫폼 간 역할분담 없이 유사중복 데이터의 공급, 표준화 되지 않은 자료의 양산 등 플랫폼의 비효율이 활용 저조로 이어짐
- 빅데이터를 공간정보와 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부합, 비표준화 등 해결하기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과 역할분담의 지혜가 필요

### Ⅲ.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토·도시 정책 추진 방향

#### 1. 국토정책 프로세스의 혁신 방향



## 2. 국토·도시정책을 위한 Big Data 활용 전략

전략  
1

### 동적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측·선제적 국토경영전략' 수립

- 인구소멸, 기후변화, 4차산업혁명, 경제회복력 등 미래변화 예측, 국토리스트 시뮬레이션으로 정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경쟁력 제고

동적국토  
빅데이터  
활용

전략  
2

### 지역교류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융합형 지역특화 정책' 수립

- 지역별 정책 고객 세분화, 지역특성과 활력도 변화, 지역간 교류성을 파악하여 지역의 특화도를 균형발전의 원동력으로 제고

지역교류  
빅데이터  
발굴

전략  
3

### 국민수요와 체감을 반영한 '소통·협력형 도시재생전략' 수립

- 도시재생의 대상과 내용을 발굴하는 과정에 국민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지역민 수요와 체감도를 적극 반영, 현장중심의 재생정책의 공감대 형성

국민행태  
빅데이터  
피드백

## IV. 주요 추진 과제

1
국정과제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융합 **패스파인더**\* 프로젝트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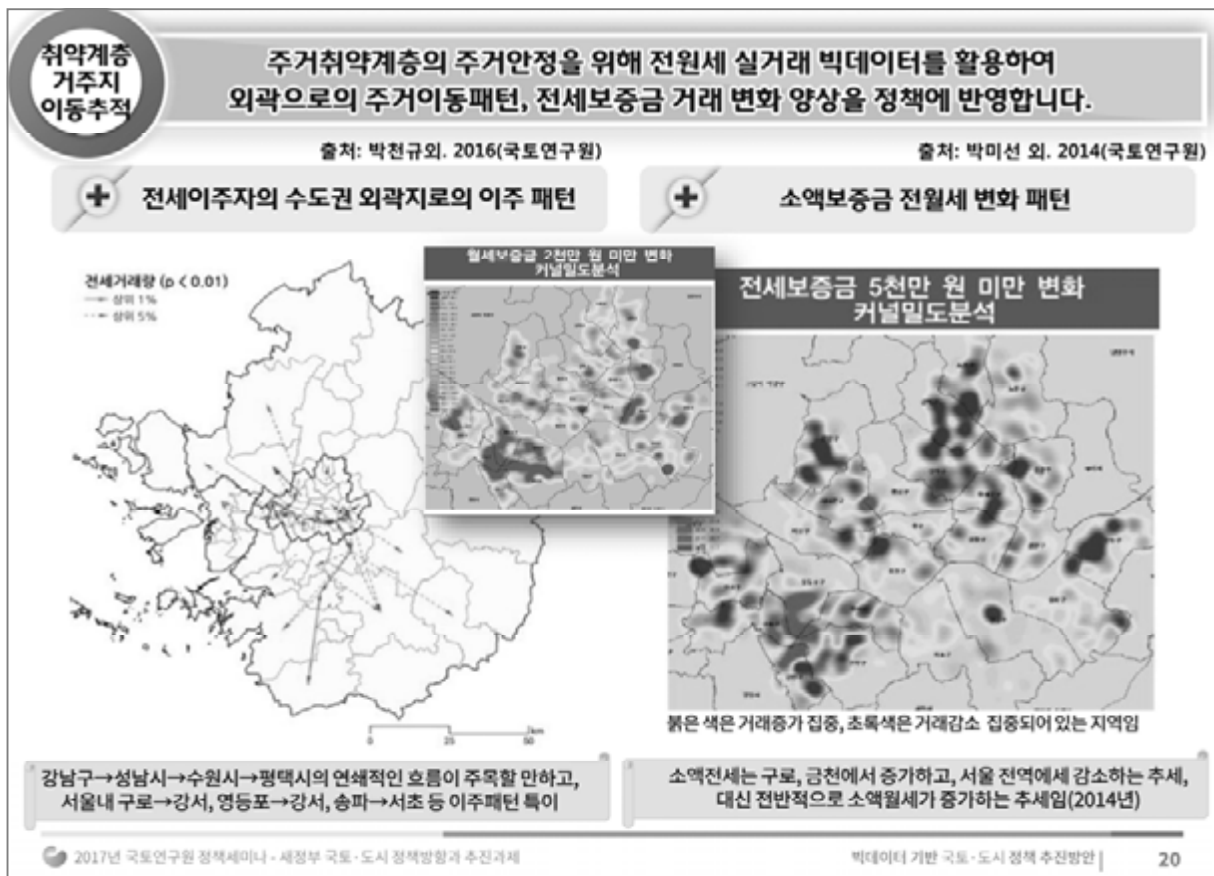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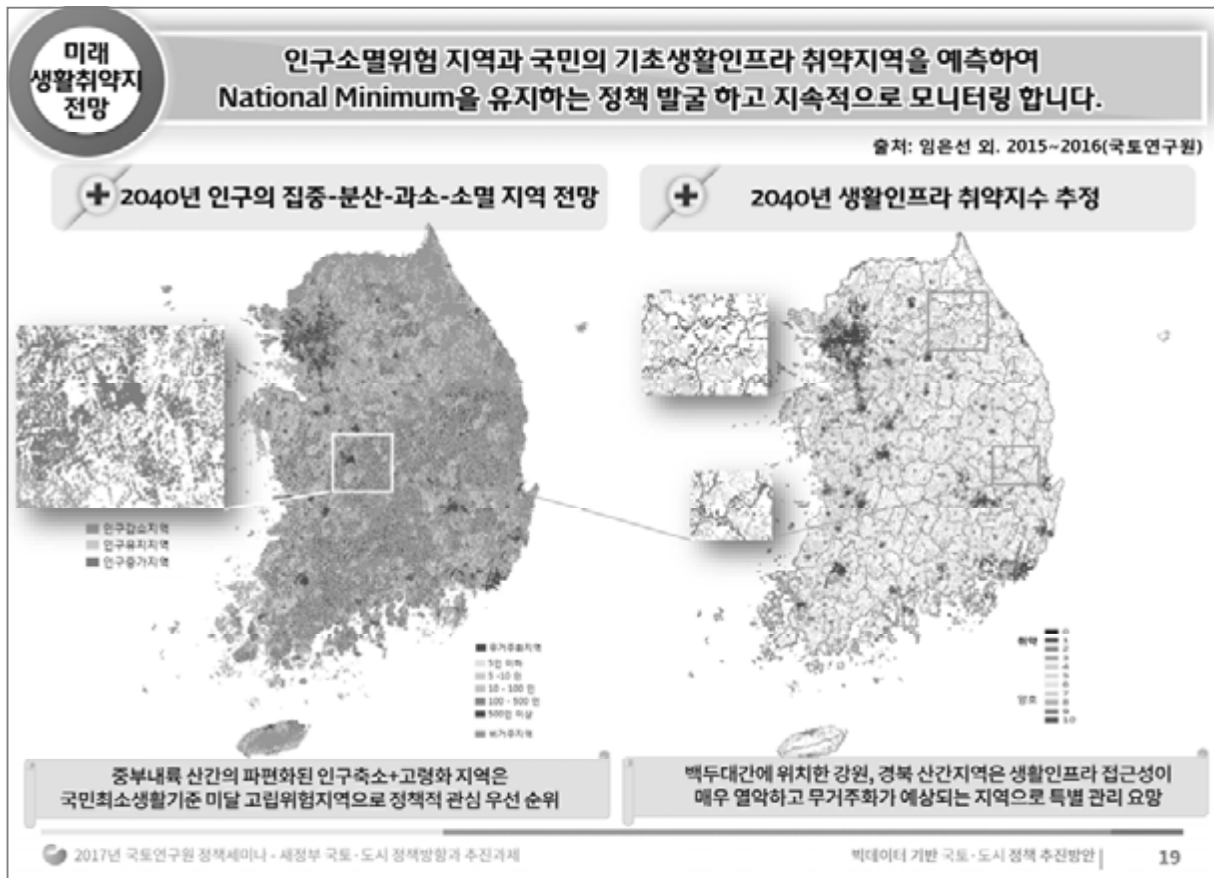
### 패스파인더(Pathfinder, 길잡이) 프로젝트: 빅데이터 활용 모델의 기획+검증+실증+확산하는 사업

빅데이터를 융합한 국토진단 기획 및 검증	실증 및 확산 정책 과제 발굴(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소멸과 이동으로 인한 공간구조변화 예측</li> <li>◦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수준, 주민수요 모니터링</li> <li>◦ 정책고객 세분화, 주택하위시장 특성 분석</li> <li>◦ 지역상권의 매출변화, 유동인구 특성 진단</li> <li>◦ 유희부동산 및 지역자산의 공급-수요 전망</li> <li>◦ 기업간 거래와 커뮤니티 진단, 주력업종 선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층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적 커뮤니티 조성</li> <li>◦ National Minimum을 보장하는 삶의 질 제고</li> <li>◦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정책지원</li> <li>◦ 주민주도 도시재생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li> <li>◦ 매력적인 랜드마크 및 지역재생의 아이콘 개발</li> <li>◦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혁신클러스터 육성</li> </ul>

2017년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 세종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빅데이터 기반 국토·도시 정책 추진방안 | 17

2
국정과제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융합 **패스파인더** 프로젝트 추진(예시)

2017년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 세종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빅데이터 기반 국토·도시 정책 추진방안 | 18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원도심 재생을 위한 역세권 상점, 전통시장, 노후주거지, 유동인구, 카드매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재생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계획을 세웁니다.**

출처: 임은선 외, 2016(국토연구원)

**+** 세종시 원도심 상업지구 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체 실태, 일자리 규모, 유동인구, 카드매출 변화

거주지 분포(총인구수)	사업장 현황(사업체수)	일자리 현황(사업체종사자수)	유동인구	카드매출변화
		①지역 조지원역전	②지역 터미널/전통시장	①지역 대학가
	사업체수	516 (개)	1,670(개)	196(개)
	종사자수	1,872(명)	4,929(명)	2,154(명)
	사업체당 종사자수	3.63(명/개)	2.95(명/개)	10.99(명/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력: 숙박음식업</li> <li>음식점과 교육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력: 도매 및 숙박 및 음식업</li> <li>종사자는 다양하게 분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력: 숙박 및 음식점업</li> <li>교육서비스업 종사자 월 등 많음</li> </ul>

• 조지원 원도심은 3개의 다른 특성이 상권이 존재하며,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대학가 상권이 많아 학교와 연계된 업종 및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유동인구와 카드매출의 변화도 상관관계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 가능

2017년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 세종부 국토 - 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빅데이터 기반 국토 - 도시 정책 추진방안 | 21

**지역경제  
활력진단**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2.0, 해안내륙권의 개발 등 성장거점지역의  
기업간 거래양상, 매출변화 등 경제활력을 상세하고 지속적으로 관찰 반영합니다.**

출처: 김중학 외, 2016(국토연구원)      출처: 황명화 외, 2016(국토연구원)

**+** 호남KTX 개통 후 접근성 개선과 소비매출 변화      **+** 기업간 거래 커뮤니티의 영향권과 협력지역 발굴

**국토 시공간 압축**

KTX 개통 후 국토면적의 22.4%인 22천km<sup>2</sup>의 접근성 개선으로 국토공간의 압축적 이용가능

※ 호남KTX 1차 단계 당 운행할 열차의 1.7배인 22천km<sup>2</sup>의 접근성 개선 효과

100% (100%)      93.7% (93.7%)      87.0% (87.0%)

시공간 압축의 양적변화      호남KTX 개통      호남KTX 개통

**개통 후 정차역 주변 외부유입인구 신용카드 지출 변화**

호남 KTX 개통 후 용산역과 광주역 주변 외부유입인구가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의 변화 파악, 광주역 500m이내에서 서울거주자카드의 사용액이 70% 이상 증가, 용산역 반역 1km이내에서 광주시 거주자카드 사용액이 42% 증가

**조선산업 기업간 판매거래 네트워크**

지역기업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기업수, 종사자수, 거래액, 거래액 밀도의 변화

지역기업(44곳)      동원/한일 수주 기업      기업간 거래연계      시군구경계

기업거래데이터를 활용하여 업종별 기업커뮤니티의 확인, 거래를 주도하는 지배기업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종사자수, 거래액 변화 나타남 인근지역에서의 영향도 있지만 원거리에는 기업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2017년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 세종부 국토 - 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빅데이터 기반 국토 - 도시 정책 추진방안 | 22

**국민체감  
모니터링**

### SNS자료를 활용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대책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모니터링한 체감도를 정책수립 및 시행 단계에 수시로 반영합니다.

출처: 김대중, 박천규 외. 2014(국토연구원)

**4.1 부동산대책(양도세/취득세 면제 및 감면) 정책 발표 후 국민반응도 변화와 주택거래매매 변동**

양도세 면제 및 감면 정책에 대한 반응 모니터링

2013년 거래량의 변동(2012년 대비)

**4-1 부동산대책 주요내용**

- 양도세 면제, 양도세 추징 기간 연장 및 면제
- 연말까지 판매하고 주택구입자 취득세 환시 면제
- 양도세 이상 액까지 수직증축 허용(일정 한도)
- 다주택자 양도세 종과 폐지
- 보급자리 분양주택 공급 면 7만 → 10만호 축소
- 양도소득세 20만호 공급
- 전세 85% 초과주택은 청약가점제 폐지
- 주택임대료 기입면장 90세 → 30세로 낮추기

국민 기대

- 지원
- 가능성
- 활성화
- 회복
- 영구인하
- 감면

국민 우려

- 불확실성
- 거짓
- 가계부채
- 하우스푸어
- 전세난
- 반대

소셜미디어 빅데이터(2013.10.1~2013.12.23.) 분석을 이용하여 '부동산', '주택'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시장에 대한 기대도 존재한 반면, 하우스푸어, 가계부채, 전세시장 불안에 대한 부정적 정서도 나타남

2017년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빅데이터 기반 국토·도시 정책 추진방안 | 23

**2**

##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토진단 및 모니터링 도입과 확대

- 국토와 도시에 대한 인문사회환경, 자연환경, 국민수요에 대한 상시적이고 정확한 Real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국토진단과 모니터링을 시행함으로써 **예측·선제형, 맞춤·융합형, 소통·협력형 정책**을 실현

중앙정부

데이터 개방

모니터링

- 국토발전 비전과 전략 설정
- 국토빅데이터 개방
- 관련 규제개선
- 인재양성 및 지원

정책수립

국민수요

정책집행

국토모니터링

국토변화

정책평가

집중 분석형 국토 진단 및 모니터링체계

협력

소통

지역진단

지방정부

데이터 공유

- 지역특성과 이슈 파악
- 지역발전 전략 수립
- 지역고유성 촉진
- 지역간 연계 협력

국민과 인간

- 국민수요 발굴
- 민간 빅데이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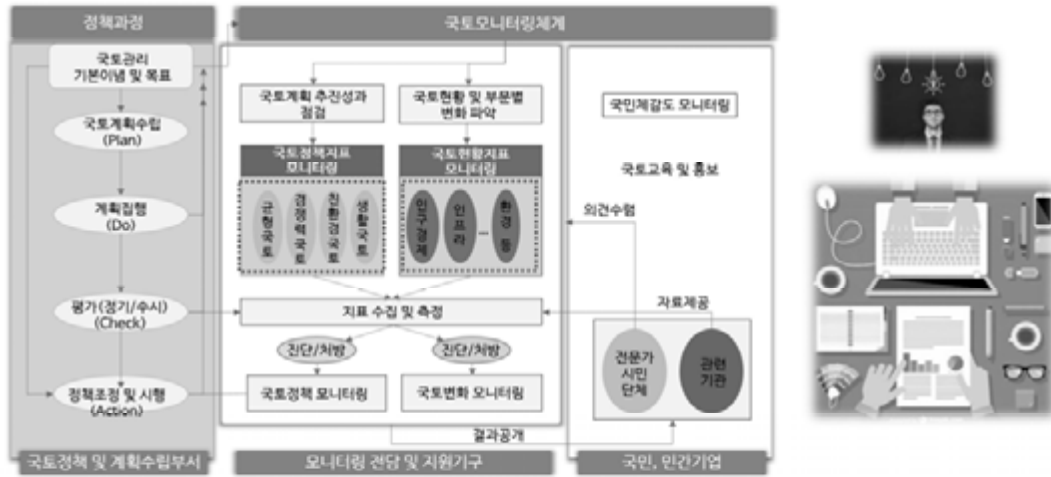
- 新 비즈니스 창출
- 기술개발

2017년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빅데이터 기반 국토·도시 정책 추진방안 | 24

96

## 빅데이터 기반 국토모니터링 확산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수요

- 공공과 민간영역 모두에서 **국토진단 전문 컨설턴트** 확충 시급!
- 국토분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수요 급증!
- 국토진단 및 모니터링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담조직 및 운영인력** 시급!



2017년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 세종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빅데이터 기반 국토·도시 정책 추진방안 |

25



## 빅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 여건 조성

- 빅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공공과 민간 빅데이터의 융합적 활용이 촉발되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가 공유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축
- 빅데이터 플랫폼의 연계 및 재정비: 부처별 구축한 플랫폼 정비, 공간 정보융합을 위한 위치기준도 품질 고도화,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협업체계 마련
- 빅데이터 개방 및 활용촉진, 개인정보 보호관련 규제 개선: 빅데이터에 대한 공개와 접근성을 용이하게 개편, 개인정보는 보호, 공공성 데이터의 공개와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규정 점검 및 개선
- 국토분야 빅데이터 전문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교육: 국토분야 빅데이터 구축 및 운영계획 수립, 국토도시진단 및 예측을 위한 컨설팅, 지자체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 국토분야 Data Scientist 육성
- 인공지능을 장착한 스마트 진단체계 구축 R&D 강화: 4차산업혁명기술을 이용하여 스마트한 의사결정이 가능토록 AI 등 분석기술 개발 및 실용화

2017년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 세종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빅데이터 기반 국토·도시 정책 추진방안 |

26



2017년  
국토연구원 정책세미나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발행인 김동주  
발행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2017-9호  
인쇄일 2017년 7월 3일  
발행일 2017년 7월 4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전화 044-960-0114  
팩스 044-211-4760

홈페이지 <http://www.krihs.re.kr>

© 2017, 국토연구원